

- 조중동 방송 만들기
- 비정규직 해고 조장
- ‘공안’ 탄압과 표현의 자유 공격
- 쌍용차 대량해고 강행
- 4대강 ‘죽이기’

**이명박의 “중도·서민” 행보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6월 10일 서울 시청광장을 뒤흔든 십만 명의 “이명박 퇴진” 함성 이후 이명박은 “근원적 처방”을 말해 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도”와 “서민”을 강조하고 있다. 시장에서 떡볶이와 어묵을 사먹으며 우리 입맛을 떨어지게 하는 쇼까지 했다.

이명박은 자신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부자를 위한다’, ‘대기업을 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대국민 홍보와 “진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조중동은 ‘이명박 서민 대통령 만들기’에 팔 걷고 나섰다. ‘대한뉴스’도 여성 모독의 막장 버전으로 부활했다.

그러나 이명박이 친재벌·반서민 우

의 정권이라는 진실은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다. 극우의 김용갑도 “이명박 정부의 지금까지 인사·경제 정책은 극우 정책에 가깝고” “보수주의자인 저도 놀랐다”고 할 정도다. 이런 “진정성”이 사람들의 뱃속 깊이 전해져 반이명박 정서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이다. “MB가 죽으면 댕 돌린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는 MBC ‘100분토론’ 시청자 전화는 이런 대중 정서를 보여 줬다.

이런 정서를 거슬러 친재벌·반민주 정책을 무작정 강행할 수도, 그렇다고 이런 정책을 포기할 수도 없는 게 이명박의 처지다. 그래서 이명박은 ‘눈가리고 아웅’을 택한 듯하다. 포장만 ‘중도·서

민'으로 바뀌어 무너진 지지기반을 되돌리려 시도하면서 MB악법과 친재벌·반민주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 항상 그랬듯 꼼수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것이다.

예컨대 용산참사 살인 공범과 골수 MB팬을 검찰총장과 국세청장에 앉힌 것을 "파격적 인사"라고 포장하고, 대운하는 포기하지만 4대강 살리기는 계속한다는 조삼모사를 "결단"이라고 포장하는 식이다. 한나라당 공성진은 '4대강 살리기'와 '비핵 개방 3000'이 "중도 실용의 대표적 정책"이라고 억지 부린다. 이명박 스스로 "우리 딸도 안 믿는 다"고 말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도 서민 정책과는 거리가 먼 사교육업체 지원

대체일 뿐이다. 다음 달에 있을 개각에서 새 총리로 거론되는 박근혜, 심대평, 강제섭 등도 ‘중도’와 거리가 먼 우익들이다.

도대체 비정규직법 개악과 최저임금 삭감 시도, 공공요금 인상, 학교 급식비 삭감, 쌍용차 대량해고와 폭력 침탈을 하면서 “서민”이라고 떠드는 게 가당키나 한 말인가?

애국기동단의 백색테러와 국정원의 민간사찰,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대량 징계,公安사범 검거 1백일 작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떠드는 “중도”는 얼마나 기가 막힌가!

이처럼 콘크리트 위에 녹색 페인트만

칠하면 ‘복색성장’이 된다는 식의 사기극에 속아 넘어갈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한국사회연구소 조사에서 이명박의 ‘서민 행보에 기대된다’는 여론은 30퍼센트를 조금 넘었을 뿐이다. 더구나 극우익들은 이런 폼소조차 “배신이 자 기회주의”(김용갑)라고 비난하며 “이명박은 탄핵돼야 한다”(조갑제)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산토끼’는 못 잡으면서 ‘집토끼’들의 불만만 사고 있는 셈이다.

결국 진정한 ‘근원적 처방’은 포장 바꾸기가 아니라 이명박 퇴진이라는 것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전지윤 기자 | ratm71@jet21.com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 추진

정부는 해고되기 싫으면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살라고 협박한다

최근 이명박 정부와 조중동은 역겨워서 보고 있기 힘들 정도로 비정규직 해고를 걱정하는 척하며 비정규직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민주노동당 당원이라는 이유로 부당 해고당한 후 끈질기게 복직 투쟁중인 비정규직 해고자 **성향아** 씨가 이것을 폭로하며 대안을 제시한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7월 해고 대란설'을 얘기하며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규정한 비정규직법 시행을 유예하려고 한다.

'경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역력이 없는 기업주들이 정규직 전환 대신 해고'를 할 수 있으니 법 적용을 유예해 해고를 막자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주요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은 4백조 원에 이른다. 이 상황에서 기업주들이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것은 경제 위기 고통전전기 뿐이다. 이런 고통전가 때문에 이미 실질 실업자가 3백만 명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 대신 기업주들이 더 한층 멋대로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해고할 수 있게 해 주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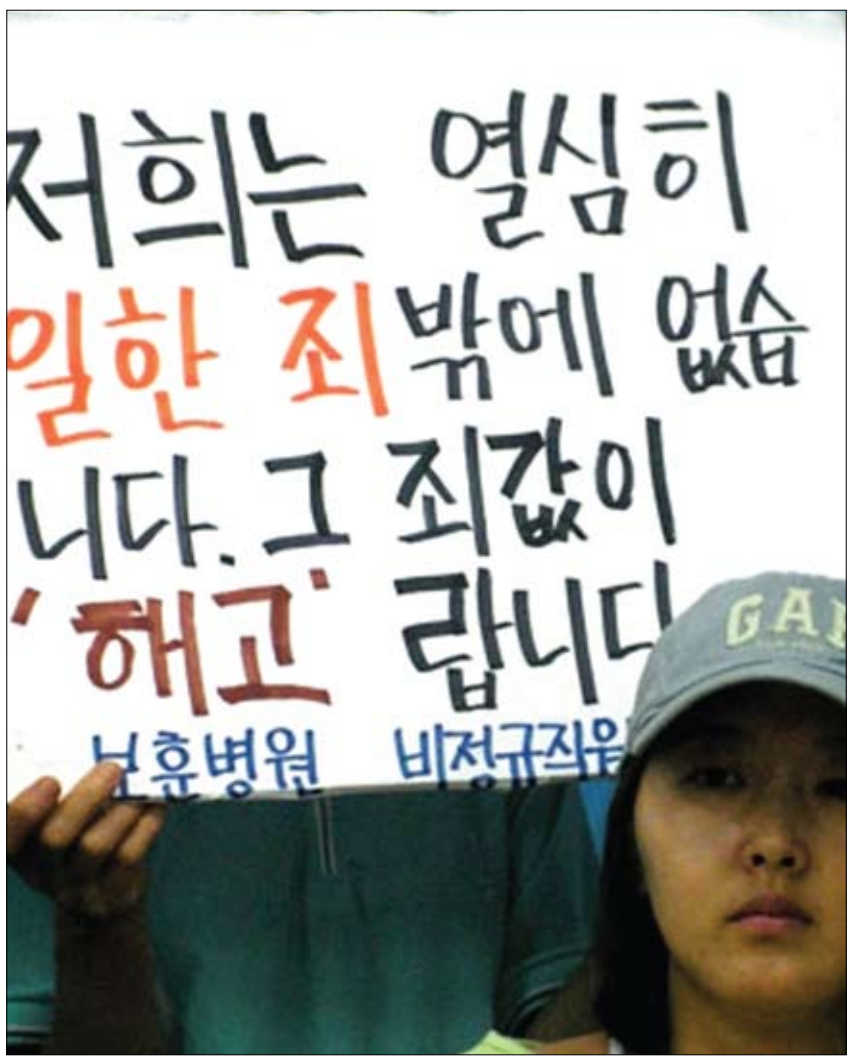
물론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비정규직법이 '2년마다 해고'를 넣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나 또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비정규직으로 5년간 상시지속적인 일을 했지만, 비정규직 전환은 고사하고, 끝내 일자리마저 빼앗겼다.

이것은 애초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이 아니라 해고법'이라며 비정규직 악법에 반대해 싸웠던 노동계의 주장이 완전히 옳았음을 보여 준다. 또한 이것은 비정규직법이 폐기돼야 할 이유이지, 개악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언제든지 해고

한편 '정규직 전환 지원 기금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비정규법 적용 유예에 합의해 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조차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는데, 어느 기업주가 전환기금을 가져다 쓰겠는가' 하고 비판할 정도로 이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사실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 때 한나라당의 도움을 받아 비정규직 악법을 만든 장본인이다. 이처럼 비정규직 '해고'법을 만든 그 때 그 사람들이 또다시 '5인 연석회의'를 통해 악법마저 더 개악하려 했다.



따라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두려기가 될 것이 뻔한 '5인 연석회의'에서 나와 뒤늦게나마 '총파업'을 선언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최근에 비정규직 해고에 맞서 끈질기게 싸운 강남성모병원 파견 노동자들은 파견업체가 아닌 강남성모병원의 직원으로堂堂하게 일터로 돌아갈 수 있었다. 또 하루아침에 해고되었던 국립오페라합창단원들도 완강하게 싸워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냈고 '국립합창단원으로 전원 고용'을 받아낼 듯하다.

화물연대 대한통운 노동자들도 전국적인 파업과 연대 덕분에 모두 복직됐다.

2006년 프랑스에서는 두 달 만에 걸친 파업과 대중시위로 비정규직 확산법인 CPE(최초고용계약법)를 철회시킨 바 있다.

결국 단결과 투쟁의 힘으로 비정규직법 개악을 막아내야 한다. 그리고 그 힘을 더 발전시켜, '2년 마다 해고'의 원인이 되는 현재의 비정규직 악법을 아예 폐기해 버려야 한다. 그리고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제시하는 기간제 사유제한, 파견제 폐지, 특수고용직 노동권 보장을 담은 비정규직 권리보장법을 쟁취해야 한다.

이명박 “중도 서민” 행보의 실체

세상을 읽는

상인: “여기 상권이 다 지금 죽어 ...”
이명박: “예, 안녕하세요”
상인: “... 문 닫고”
이명박: “안녕하세요, 예~”
— 이문동 시장에서
국민과 ‘소통’ 하는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 대책은 우리 딸도 안 믿는다”
— 이명박

“[이명박은] 떡볶이집 가지 마십시오. 손님 떨어집니다. 아이들 들어 올리지 마십시오. 애들 경기합니다”
—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설득력있는 지적

“‘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에서 진화한 것이다 ... [이명박은] 대운하를 ‘절대’ 안한다는 식으로 ... 말을 할 수가 없다 ...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다.”
— 전 대통령 비서실장 류우익

“[대한니우스에] 울분을 토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과거를 회상하는 사람도 있다. 잘한 것이라 본다”
— 문화부 2차관 김대기

“전부 직장 생활을 해서 아침 그나마 한끼를 식구가 같이 앉아서 먹고 있다. 그런 아침까지 무상 급식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전체 학생에게 무상 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의타심만 기르고 교육상 좋지 않다고 본다”
— 경기도 교육위원들의 무상 급식 예산 삭감 이유

“요즘 굶는 아이들이 없어요. 도 대체 누가 굶어?”
— 경기도 교육위원 유옥희

“담담 감사가 지난 4월 체포 후 수사과정에서 ‘PD수첩’ 프로그림은 반미 종북주의 아니냐’고 물었다”
— <PD수첩> 조능희 PD, 뒤편에는 뒤편 보인다더니

“해우산이 ‘구두선(口頭禪)’이 아니며 실제로 해무기가 사용될 수 있다는 의지를 북한에 분명히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핵 전쟁이 벌어지는 <조선일보>

MBC노조 이근행 위원장 인터뷰

“정부의 ‘PD수첩’ 편향성 지적은 공격의 빌미일 뿐”

지난 두 차례 언론노조 파업의 핵심 부위였던 MBC노조 이근행 위원장을 인터뷰했다. ‘PD수첩’ 제작진이 기도 했던 그는 지난 2월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정부와 보수 언론은 ‘PD수첩’ 등이 중립성을 잃은 왜곡 보도라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론이 궁극적인 의미에서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에 대한 정보를 취사선택한다는 것은 모두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이구요.
언론이 현실을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검증하고 비판하는 것이 본연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정의의 관점에서건 진실의 관점에서건 가장 올바른 가치판단을 하는 것이 시사프로그램의 의무라고 생각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편향성을 갖는다는 얘기는 공격하기 위한 빌미에 불과합니다.

검찰이 ‘PD수첩’ 작가의 이메일을 언론에 공개했는데요.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이 기소 사실과 무관한 개인 사생활이 담긴 이메일을 무단정으로 열어 본 것은 국가적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한 작가, 한 여성의 이메일을 압수해서 다 열어보고 다 뒤지고 그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국민 누구라도 이제는 권력에 의해서 사생활이 살살이 까발려지는 것과 똑같은 상황을 겪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인권이라는 개념은 요만큼도 없는 국가 권력과 그 하수인인 검찰이 개인의 사생활을 거의 무한 침해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나는 검찰이 분명히 사

법적으로 단죄를 받아야 하고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표현의 자유 탄압에 맞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해결책은 항상 싸우는 거죠. 싸워서 이기지 않더라도 싸워야죠.
싸움 자체를 포기했을 때는 정치적 패배의식이 대중에게 파고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작은 싸움이라도 이길 수 있도록 연대하고 큰 싸움 못지 않게 결사적으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합법적인 권력이라도 지금처럼 자의적으로 남용됐을 때는 불법적·혁명적 방식으로 권력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건데



이근행

요. 지금도 [이명박 정부] 임기를 채울 수 있겠냐 하는 얘기가 많아요. 그동안 선불리 이명박 퇴진을 얘기하지 않은 이유는 합법적 정부고 퇴진시킬 여량이 아직 이쪽에 없다는 객관적 정세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세라는 것도 금방 바뀌죠. 대중이 정권을 퇴진시킨 사례는 언제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아쉬운 것은 지난해 촛불과 올해 노무현 추모 정국을 거치면서 엄청난 정치적 에너지가 있는 데도 그것이 어떤 정치적 구심을 갖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치적 구심이 필요합니다.
인터뷰·정리 장호중 기자

한예중 총학생회장 기고

“한예중 사태는 예술 전반에 대한 정부 통제 시도”



방성혁 한예중 총학생회장, 한예중 학생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5월 19일, 한예중과 15년 넘게 함께해 오신 황지우 선생님이 기자회견을 열어 총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히셨습니다.
이제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일 뿐이라며 우리를 다독이던 문광부의 태도가, 이번 최종 결과 통보를 통해 더욱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첫 감사 내용에 조목조목 주석

[편집자주] 이명박 정부가 자신의 입맛대로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중)를 해집어 놓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는 최근 한예중에 대한 ‘표적 감사’를 벌이고 학과 축소와 폐지, 총장과 교수 중징계 등을 지시해 학교 존폐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신재민 문화부 차관이 “유럽에서는 ... 우파가 집권하면 우파에서 총장이 나” 온다고 말하는 등 이것이 자유로운 창작 활동에 대한 공격이자 정부 비판적인 인물을 제거·통제하려는 시도임이 드러나고 있다.

두 사안 중 다섯 사안들만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변경된 다섯 사안들에 대해서도 ‘폐지’라는 단어를 ‘개선’ 혹은 ‘시정’으로 바꾸는 등 모호한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교수님들의 중징계 건 역시도 큰 수정은 없었습니다. 결국 문화부는 기존의 태도를 견지하고 조금 더 부드러운 어투로 같은 내용을 다시 보낸 것뿐이라 생각합니다.
문화부의 감사는 여전히 학교의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에 대한 침해이며, 학교 운영에 관한 부당한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예중 비상대책위원회와 각 이론과 연석회의가 주최한 심포지엄에 여러 지식인들이 함께해 줬습니다. 전

국예술계열대학생연합이 한예중 사태에 대해 우리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시국선언을 발표한 문학인들도 황지우 교수님을 거론했습니다. 미술가들 역시 문화예술계의 자율성을 요구하는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영화인과 배우들도 각종 성명과 함께 현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는 한예중만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는 예술 교육에 대한 간섭, 더 나아가 예술 전반에 대한 통제입니다. 우리 학교에 대한 문광부의 태도는 현 정부의 과격한 대학 법인화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한예중 학생들은 앞으로

시국에 대한 걱정과 문화예술계에서 간섭 없는 자율적 창작 활동을 위하여 힘쓸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국민이자 대학생으로서 문화예술 위해 저희는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좌와 우가 아닌 앞으로 날아갈 날개를 가지려 합니다. 어느 순간 사라진 우리 앞의 불빛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날개를 꺾고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들 앞에서, 우리 입마저 닫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술로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일어섭니다. 자유의 날개를 꺾으려 하는 현 정부의 어리석음을 규탄합니다.

검찰총장 내정자 천성관

검증된 ‘공안 마녀사냥 전문가’

이명박은 대검찰청 공안1과장, 서울지검 공안부장, 대검찰청 공간기획관 등 ‘공안 외길’을 걸어온 천성관을 검찰총장에 내정했다.
천성관은 경찰의 용산 철거민 학살에 면죄부를 준 살인 공범이며 정부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PD수첩> 막장 수사를 지휘한 장본인이다. 힘 없는 탈북여성들 마녀사냥에 이용한 원정화 ‘간첩’ 사건도 그의 ‘작품’이다.
그야말로 공안 사건을 통해 민주주의 파괴와 인권 압살 ‘외길’을 걸어온 악질 중의 악질이다.
천성관은 1993년에 ‘남한조 선노동당’ 사건에서도 “짜깁기식 수사”(국정원 과거사위원회)로 김낙중 전 민주당 대표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1998년에도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15명의 좌파 활동가를 구속한 바 있다.
보수적인 법원도 이 중 12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할 정도로 그는 마구잡이 탄압을 했다.
이런 앞뒤없는 ‘공안’ 탄압 덕분에 천성관은 이명박의 눈에 띄었다.
이미 지난 1월 검찰 인사 당시, 이명박은 천성관을 최고의 요직 중 하나인 서울지검장으로 기용했다.
당시 <중앙일보>는 “오랜만에 진짜 공안 전문가가 배치됐다”며 반겼다.
노동자·서민 죽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하는 올해, 이명박은 분출할 수 있는 저항의 목소리를 억누를 검증된 ‘공안 마녀사냥 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했다. 그래서 사법시험 기수 3계단을 건너뛰어 천성관을 검찰총장에 ‘파격’ 임명한 것이다.
천성관은 강남에 아파트 2채(각각 28억원, 9억원)를 소유한 ‘강부자’이기도 하다. 이런 자가 검찰총장 자리에 앉아 탄압의 칼을 휘두르고 마녀사냥의 광풍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박건희 기자 | pkh@left21.com

‘국정 쇄신’ 요구에 ‘공안’ 탄압 강화로 답하는 이명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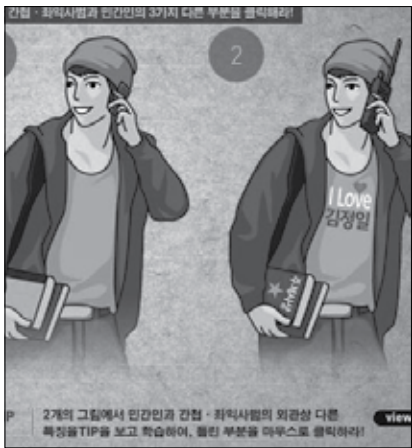
검찰, 경찰, 국정원을 총동원한 이명박의 공안 탄압과 마녀사냥이 정신없이 계속되고 있다. 불과 보름 만에 좌파 서적 판매 부수 조사, 이희철 한총련 전 의장과 김하얀 서총련 전 의장 체포, 실천연대 간부 자택 압수수색, 범민련 활동가 구속 기소, 국정원의 시민단체 사찰, 잇따른 ‘상습시위권’ 체포 등의 일이 터졌다. 특히 피도 눈물도 없는 경찰은 회귀질환을 앞고 있는 김하얀 전 의장을 구속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검거하겠다는 ‘안보 위해 사범 1백 일 수사 계획’을 진행 중이다. 이미 올해 들어서만 반년 만에 30명이 ‘보안사범’으로 체포됐는데, 이는 지난해 1년간 체포된 사람 수와 맞먹는다.
또 오는 12월까지 보안경찰 1천8백여 명을 모두 보안수사만을 전문으로 하는 ‘보안경과자’로 선발하려 한다. 이 제도

는 10년 만에 부활한 것으로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는 마녀사냥 ‘전문가’들을 훈련·육성하겠다는 뜻이다.
국정원은 ‘국정원이 전수하는 대한민국 수호헌법 안보 신권’이라는 이름으로 ‘간첩·좌익 사범 색출 플래시 게임’을 진행하며 좌파 활동가 신고를 독려하는 열기적인 짓까지 하고 있다.
이처럼 정신없는 공안몰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공안 전성

시대 오냐” 하며 기뻐했다.
정치적 정당성이 사라진 이명박 정부는 물리적 탄압에만 계속 매달리고 있다. 이미 올해 공안 수사 예산은 30퍼센트 가량 증가했고, “공안 검사들의 오랜 숙원”(〈중앙일보〉)인 폐지된 지 4년된 대검찰청 공안3과 부활도 추진했다.
이는 경제 위기와 정치 위기에 대한 이명박의 대처 방식이다. 이명박은 “서민들이 앞으로 1~2년 더 고생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위선을 떨었지만 노동자·서민 죽이기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터져나올 수 있는 저항을 꺾고자 탄압을 통해 좌파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냉각시키려 한다.
따라서 이명박이 탄압의 칼을 휘두르며 돌진하고 있는 지금, 진보진영 전체가 강력한 단결과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박건희 기자 | pkh@left21.com



국정원의 ‘안보 신권’

미디어 악법과 언론 탄압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인터뷰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면 이 정권을 교체해야”

두 차례에 걸쳐 MB악법을 저지하는 데 큰 구실을 한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을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만났다. 언론노조는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상정 시도를 하는 즉시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명박 정부가 ‘미디어법’을 왜 이토록 밀어붙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 정권은 다양한 여론을 반영하는 방송 보도가 자신들의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계분명합니다. 게다가 자본이 투입되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신자유주의적인 생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이구요. 세번째는 보수 정권 재창출을 위해 방송을 통제하고 언론인들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반면, 한나라당이 내세우는 논리는 국민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문·방송 겸업 허용이 신문사의 방송 장악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지상파나 종합편성 채널들은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대규모 방송사들이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조종동 같은 대형 신문사밖에 진출할 수가 없는 거죠.

조종동의 정치적 영향력과 대재벌들의 자본력이 합쳐지면 광고 재원들은 이들이 독식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지난 2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합의로 설치된 미디어발전위원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는데요.

처음부터 한나라당은 위원 구성에서 전문가들이 아니라 뉴라이트 단체 사람들이나 한나라당에 공천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들로 구성했어요.

지난 1백10일 동안의 위원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데 그걸 한 번 죽 읽어보시면 이 위원회가 정말 왜 ‘봉숭아 학당’으로 불릴 수밖에 없었는지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미디어위원회는 1백10일 동안 한나라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사진 임수현

당의 법안 내용을 그대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끈 것에 불과합니다. 요식적인 절차와 과정을 갖춤으로써 자신들의 날치기 강행 통괄을 포장하려는 하나의 술책에 불과했습니다. 위원회 회의록이 조금 길긴 하지만 거의 코미디 대본 보는 것처럼 아주 재밌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이강래는 9월로 연기하며 타협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데요.

미디어발전위를 종로 해체하면서 제가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에게 요청한 것이 ‘선부르게 절충이나 타협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최대한 막기 위해 싸우다가 마지막에 가서 힘이 모자라서 막지 못한다면 차라리 한나라당이 원안을 일방처리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야당이 어설픔게 절충안을 만들거나 타협하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부담 때문에 나중에 바로잡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 법안은 단지 방송사 지분을 몇 퍼센트 차지하느냐 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

라 언론계 전체에 대한 재편,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을 강화하는 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의 집권 가능성을 낮출 수밖에 없는 법이거든요. 자신들의 이해관계와도 밀접히 연관돼 있기 때문에 쉽사리 타협하거나 물러서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야당들이 물러서지 않도록 시민단체들과 저희 같은 당사자들이 국회 밖에서 강력하게 지지해 주고 싸우는 노력들이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D수첩〉, 한예중 문제 등 이명박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억누르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뭡까요?

근본적인 해법은 지금 정부 하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을 교체하는 것, 그것이 선거든, 아니면 일방통행을 계속한다면 조기 퇴진이 될 수도 있고, 반드시 변화가 따른 다음에야 가능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반MB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다양한 단체나 세력들이 크고 작은 차이가 있고 이견도 있지만 전선을 하나로 묶어야 할 필요가 강하게 제기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고 보고 있어요.

이명박 퇴진 요구가 설부른 게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는 저도 ‘이명박은 사과하라, 정책 기조를 바꿔라’ 할 수는 있어도 퇴진하라고 요구하기에는 아직까지 그 희생이나 피해자의 수가 적은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게 생각하게 된 것이 정부가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 1만 6천 명을 전원 징계하겠다고 대응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정권에 의한 피해자, 조종동에 의한 피해자, 재벌에 의한 피해자들이 엄청난 수로 아주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는 거죠. 대체로 한 사람이 피해를 입으면 주변에 스무 명 정도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교조 1만6천 명 징계면 무려 32만 명이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PD수첩〉작가 공격도 작가들 수천 명에게 영향을 끼쳤구요. 그만큼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인터뷰·정리 장호중 기자

이명박의 언론·표현의 자유 억압

인간 존엄과 사회 정의를 짓밟으려는 공격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개원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언론악법을 기어이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언론악법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민생법안’이라고 선전해 왔지만 국민의 62.2퍼센트가 이를 ‘방송장악 등 정치적 차원’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문방위 위원장 고흥길도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 진출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미디어법을 하는 이유”라고 실토했다.

이명박 정부의 조종동 살리기와 비판 언론 죽이기는 매우 노골적이다. 조종동 광고 거부 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 연대(언소주)를 탄압하는가 하면 미운털 박힌 MBC만 쏙 빼놓고 KBS와 SBS에 1억 8천만 원 규모의 신종플루 예방 광고를 주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는 조종동의 ‘표현의 자유’는 한껏 고무하는 한편,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들에는 재갈을 물리려 한다. 검찰이 PD수첩 작가의

이메일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고 청와대 대변인 이동관이 대놓고 MBC 경영진 사퇴를 종용한 것은 최근 사례일 뿐이다.

집권 직후 KBS와 YTN 등 언론계에 낙하산을 내려보냈고 MBC 〈PD수첩〉PD들을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시도하기도 했다.

인터넷 게시판에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썼다는 이유로 미네르바를 구속했고 더 나아가 사이버 모욕죄 등을 신설하겠다고 하며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으려 한다.

이명박 정부가 이토록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것은 지난해 촛불항쟁 이후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반란의 기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런 불만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

불만의 원인이 양극화, 비정규직 양산, 정리해고, 복직 삭감 등에서 비롯한 것인데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겨 기업주들의 이윤과 부자들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가

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근본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사상 검열

이명박은 이런 첨예한 갈등 속에서 언론 보도나 인터넷이 대중의 분노를 결집시키는 계기가 될까 봐 두려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것이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것은 단순히 정부 정책이나 정권에 대한 반대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를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기본권에 대한 탄압이다. 표현할 수 없는 ‘사상의 자유’는 사상 검열을 의미할 뿐이다.

실제로 유인촌의 문화체육관광부는 〈반두비〉등 정부에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은 영화에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내렸고 한예중에서 이문 교육을 폐지하려 하는 등 자유로운 의식 발전 자체를 가로막으려 한다.

그래서 미국의 진보적 지식인 하워드 진은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하는 까닭을

이렇게 표현했다. “첫째,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한 인간으로서 존재하기 위해, 자주와 자존을 지키기 위해, 세계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 살아가기 위해, 생생히 살아 있기 위해 표현의 자유는 본질상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세계를 변화시키고 평화와 정의를 실현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결정하는 정부와 이를 뒷받침하는 사법부, 그리고 거대 언론사가 ‘표현’에 필요한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현실이 근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권리장전[헌법]의 존재만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으려는 것은 심각한 착오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전을 통해 자유를 쟁취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이것은 항상 진실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억누르기를 좌절시켜야 한다. 지난 1년 반의 경험으로 볼 때 이는 이명박 정부를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장호중 기자 | rednuc@left21.com

다함께의 이론지

마르크스21

출간!

2호(2009년 여름호, 15,000원) 목차

자발성, 전략, 정치 _ 크리스 하먼

네그리와 하트로부터

마르크스와 엥겔스를 지키기

세계의 노동계급 _ 크리스 하먼

세계화, 제국주의,

자본주의 세계체제 _ 알렉스 캘리니코스

중국의 성장통

최장집의 민주주의론

2009년 노동조합 투쟁과 활동가들의 과제

인터넷 민주주의 — 신화와 현실

조직자 〈소셜리스트 워크〉

민주집중제에 관한 메모

1호(2009년 봄호, 12,000원) 목차

금융 위기와 실물 경제

세계화와 신경제라는 신화

'다중 지성'은 유효한 개념인가?

프랑스 반자본주의신당(NPA)

창당에 부쳐 _ 알렉스 캘리니코스

사노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

윤소영 교수의 알튀세르주의

촛불운동과 다함께

용산참사 항의운동 참가 경험을 돌아보며

파병반대국민행동 논쟁사

구독 신청 문의

Tel 02 2271 2395 / Fax 02 2271 2396

서점에서도

레프트21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서울대원)

인서점 (건국대원)

풀무질 (성균관대원)

이음책방 (대학로)

녹두 (동국대후문)

전교조 탄압과 ‘사교육과의 전쟁’

‘전교조 없는 세상’을 꿈꾸는 MB의 전면적 도발



송재혁
전교조 서울지부 참교육실장

이쯤 하면 이제 막 가자는 것이다. 드디어 MB정권이 숙원 사업 하나를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있다. ‘전교조 없는 맑은 세상’을 꿈꾸는 MB정권은 1989년 이후 최대 규모로 전교조 교사를 징계하는 칼을 뽑았다. 20년 만에 부패 정권과 참교사의 한 판 대결이 재개된 것이다. 일제고사와 서울교육감 선거를 빙자해 이미 많은 전교조 교사들을 탄압해 온 저들은 이제 시국선언을 건수로 잡아 전면적인 도발을 해 왔다.

시국선언이 각계에서 들불처럼 일어나고 전교조에 이어 세 공무원 조직의 선언이 예견되자 겁주기로 이를 위축시키는 한편 전교조 손바 주기의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 전원을 주의·경고 조치하고 선언을 주도한 88명에 대해 검찰 고발·해임·정직의 중징계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전교조는 지난 6월 26일 전 교원을 대상으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교사 서명운동과 제2차 시국선언을 펼치기도 했다. 나아가 교과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교과부장관 퇴진 운동 등 총력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앞에서는 현안인 자율형사립고와 학교선택제 폐기를 요구하며 서울지부가 철야농성을 진행중인데, 29일

에는 서울지부장이 평등교육학부모회 회원과 청소년 활동가들과 함께 삭발하고 투쟁 결의를 다졌다. 이어서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 위원들이 청와대 입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서한문을 청와대에 전달하려다 위원장, 서울지부장을 포함해 16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전교조는 7월 5일 ‘전교조 학살’을 규탄하는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 사회에서 공무원·교사도 시민으로서 정치적 견해를 표명할 권리가 있음은 정상적인 초등학교 사회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기초 상식이다. 하물며 이를 빙자해 ‘교사 대학살’을 자행하는 작태는 장기 두다가 장기판을 얹어 버리는 것보다 더 치졸하다.

그러나 정권은 곧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번 교사 선언은 단 3일 만에 급하게 조직됐음에도 전국에서 1만 7천여 명이 참가했음에 주목해야 한다. MB정권에 대한 교사들의 반감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 준다. 그동안 MB정권의 교육 정책은 영양가는커녕 독소만 듬뿍 담은 반교육 정책이었다. 또한 철저히 상위 소수 1퍼센트만을 위해 복무하는 희망 없는 정부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러할진대 양심과 정의를 가르치는 교사라면 어찌 침묵하고 굴종할 수 있겠는가. MB독재정권은 몽둥이와 채찍으로 들불을 끄려는 안이한 발상만 반복하고 있다. 고문만 안 할 뿐 과거 군사독재보다 더한 이 정권의 종말이 어머할지는 중학교 역사 교육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자라면 누구나 예견 가능할 것이다.

전교조는 지난 20년 동안 단 하루도 탄압받지 않은 날이 없었다. 이는 전교조가 단 하루도 사회적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할지 모른다. 태생부터 정치적인 전교조를 비정치의 울타리 안으로 내몰려 할수록 전교조는 더욱 정치적으로 돼 갈 것임을 경고한다.

우리는 현재 선정 작업이 진행중인 소위 자율형사립고 문제에도 눈을 부릅뜨고 주목·대응해야 한다. 자사고는 자살고요, 귀족학교, MB학교다. 연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의 학비를 요하는 이 학교에 들어갈 수 없는 대다수뿐 아니라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소수를 위해서도 반대해야 한다.

교육과정 자율화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차별화된, 영혼 없는 입시교육에만 매몰돼 계급의 높은 벽돌로 쌓은 그들만의 학교 울타리 안에 갇힌 채 근거 없는 우월 의식 또

는 남모를 열등감에 사로잡힌 반사회적 인간으로 변화될 그들 소수의 비극은 명료히 예견된 것이다. 그들 소수에게도 민주 사회의 일원으로서 더불어 건강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보장돼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모르니 일단 지켜보자. 안이한 생각은 위험하다. 꼭 독약을 먹어 봐야 독약임을 알고 꼭 죽어 봐야 삶이 가치 있음을 깨달을 만큼 우리는 미련하지 않다. 자사고는 곧 7월이면 선정된다. 있을 때 잘해야 하는 게 아니라 없을 때 잘해야 한다.

매년 매달 잔인한 입시서열화 경쟁교육으로 청소년들이 죽음에까지 내몰리는데도 일말의 반성이나 재고 없이 일제고사, 자사고, 고교선택제, 학교서열화, 교육시장화를 향해 우직하게 달려가기만 하는 이명박 정권과 사교육감 공경택은 싸이코패스의 전형이다. 학생의 힘으로, 학부모의 힘으로, 교사의 힘으로, 그리고 민중의 힘으로 이 불치병을 치료해 주자.

2009년 6월 29일 밤,
보슬비 내리는 시교육청 앞 농성장에서

7월 19일(일) 전교조, 공무원노동조합, 야4당, 민생민주국민회의가 공동주최하는
시국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과의 전쟁’

사교육비 경감 대책인가, ‘사교육업체 지원 대책’ 인가

이명박 정부가 정치 위기에서 벗어나 고자 ‘중도실용’과 ‘친 서민’을 표방하면서 ‘사교육과의 전쟁’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고 있다.

이명박의 핵심 측근이자 실세인 정두언·곽승준은 조속한 정책 추진을 강조하며 7월 중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거론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은 대부분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한나라당이 ‘반시장적’ 정책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던 것들이다. 게다가 사교육을 줄이는데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해 모두 폐기됐던 것들이다.

정두언·곽승준이 내놓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핵심은 입시에서 내신 비중을 줄이는 것이다.

외고 입시는 영어·국어 내신만, 과학교 입시는 수학·과학 내신만 반영한다는 것이다. 또, 대학입시에서는 현재 9등급 상대평가인 내신을 5등급 절대평가로 바꾸자고 한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국·영·수 부담이 더 늘어나는 셈이다. 게다가 정두언·곽승준은 특목고 입시에서 내신을 줄이는 대신 영어 구술 시험과 심층 면접 비중을 늘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조기 유학이나 입시 학원 의존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고교 내신 절대평가제도 2004년까지 실시된 바 있는데 당시 절대평가제 하에서 내신보다 비중이 높았던 수능·논술 사교육으로 학생들이 몰리면서 사교육은 전혀 줄지 않았다. 결국 내신은 다시 상대평가제로 바뀌었고, 학생들은 친구에게 노트도 빌려주지 못하는 삭막한 교실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정두언·곽승준은 절대평가제로 다시 돌아가자면서 그것이 낳을 ‘내신 부풀리기’의 대안으로 전국적인 일제고사를 제시한다.

이렇게 되면 그나마 양상하게 남아 있



이명박의 대책은 이 학생들을 입시 지옥에서 구하긴커녕 더 밀어넣을 것이다.

사진 임수현

던 고교평준화는 완전히 허물어지고, 고교등급제가 공공연히 시행된다. 명문고·특목고에 가기 위한 경쟁, 더 좋은 일제고사 성적을 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대학 입시에서는 비중이 커질 수능·논술·본고사에 대한 사교육이 늘어날 것이다.

학원 시간을 밤 9시나 10시로 규제하

는 것도 입시 경쟁이 계속되는 한 고액 과외만 부추길 공산이 크다.

그래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발표 후 메가스터디 등 대형 사교육업체들의 주가는 오히려 올랐다.

대형 사교육업체들의 매출은 경제 위기 상황임에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폭 증가해 왔다.

메가스터디 주가 상승

이명박 정부가 대학입시 자율화란 명목으로 사실상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허용하고, 국제중, 자율형 사립고 등을 대폭 늘려 중등학교 평준화를 무너뜨리고 입시 경쟁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런 점에서 진보신당이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해, 미흡하지만 ‘환영’한다고 밝힌 것은 아쉬운 일이다.

청소년들이 입시 경쟁 강화에 맞서 “내신 강화도 수능도 본고사도 대안이

아니다”하고 외쳤듯이 대학 서열 체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입시 제도를 어떻게 바꾸더라도 사교육을 줄일 수 없다. 대학 서열 체제 아래서는 공교육 강화도 해법이 될 수 없다. 돈과 시간이 있는 학생은 사교육을 통해 1점이라도 점수를 높이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을 비인간적 입시 경쟁에서 구출할 유일한 방안은 대학을 평준화하고 수능 시험을 졸업자격고사로 바꿔, 고등학교를 졸업한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하도록 하는 방법뿐이다.

대안은 단순하며, 중·고교평준화를 실행했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실행하는 방법도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 지배자들의 격렬한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방안을 추진하려면 강력한 대중운동이 필요하다. 그런 운동은 이명박의 경쟁 강화 교육 정책에 맞서는 저항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강동훈 기자 kdh@left21.com

무상 급식이 ‘비교육적’이라는 파렴치한들

경기도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반 MB 교육’을 내세워 당선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무상 급식 확대 정책 관련 예산을 절반(85억 원)이나 삭감해 버렸다. 이들은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혁신 학교 건립을 위한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

이들의 예산 삭감은 명백히 진보적 교육감과 정책에 대한 “판지놓기”다. 이들은 교육위 회의에서 “교육감이 대통령의 교육 정책을 반대해도 되느냐”며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무상 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학생들의] 의타심만 기르고 교육상 좋지 않다”, “그 예산[무상 급식 예산]은 학력 향상과 질 좋은 교육 제공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는 이들의 반대 논리는 우익들이 말하는 ‘공교육 강화’가 무엇을 뜻하는지 잘 보여 준다.

가난한 사람은 자립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조잡한 시장 논리, 무상 급식보다 성적을 높이는 데 돈을 써야 한다는 경쟁 논리가 깔려 있는 것이다.

우익들이 말하는 ‘공교육 강화’는 자립형 사립고 확대처럼 부유층이 공교육에서도 특권 교육을 받는 것을 뜻할 뿐, 무상 급식 확대, 교사·교실 확대와 같은 진정한 공교육 환경 개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번 예산 삭감 사태는 우리가 선출한 교육감이 교육 관료와 기성 정치인들의 반대를 뚫고 진보적 교육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뒷받침하려면 대중 행동의 힘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강동훈 기자 kdh@left21.com

종합

정권 퇴진 논쟁

이명박은 퇴진해 마땅한 ‘사회적 흥기’ 다

이명박 정부는 최근 MBC <PD수첩>이 “음주운전”을 하는 “사회적 흥기”라고 마녀사냥하며 “외국 같으면 경영진 총사퇴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집권 1년 만에 이 나라를 서민지옥으로 만든 이명박 정부야말로 ‘사회적 흥기’이며 퇴진해 마땅하다는 게 밀바닥 민심이다. 근래 시민사회단체들의 ‘이명박 사과’ 요구는 이런 민심에 한참 못 미쳤다. 결국 뜨거운 민심의 열기 속에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최근 공식적으로 ‘이명박 퇴진’을 내걸었다. 이것은 대중의 정서에 부합할 뿐 아니라 전략적 목표를 제시하며 대중의 분노를 진정화한 표적으로 결집시키는 참으로 올바른 결정이다.

물론 아직 이명박 퇴진을 내걸기엔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이명박 퇴진 요구는 이미 1년 전 촛불항쟁 때부터 제기된 것이다. 당시 이명박의 온갖 미친 정책들이 동시에 쏟아지자 사람들은 집권 1백 일도 안된 정권의 퇴진을 요구했다. 그 후 1년 동안 용산참사 등이 벌어지며 이명박 정권이 퇴진해야 할 이유만 더 늘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이런 밀바닥 민심을 적극 수용하는 것이지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대안 부재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이 물러난 자리에 박근혜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을 물러나게 하려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중투쟁이 필요하다. 만약 우리가 그런 투쟁으로 이명박을 퇴진시킨다면, 노동자·서민의 자신감은 커질 것이고 박근혜 따위의 우익들이 설 자리는 줄어들 것이다. 조중동 역시 입을 함부로 놀리기 어렵게 될 것이다. 그 속에서 진보적 대안 정권과 권력의 문제도 모색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친재벌·반민주 정책들을 실행하기 만만치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퇴진이라는 목표를 제시할 뿐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할 수단, 즉 아래로부터 대중투쟁과 노동계급의 집단적 행동·파업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열광적으로 ‘MB OUT’을 외치는 촛불 시인들

사진 이미지

대중의 힘

과연 우리에게 이명박을 퇴진시킬 능력이 있는가 하는 물음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노동자·서민은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다. 지난해 촛불항쟁 때 그 잠재력은 6월 10일 1백만 명의 결집으로 절정을 향했다. 당시 촛불은 청와대 코앞까지 넘실대며 이명박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민주노총 총파업이라는 빠진 고리만 채워졌다면 정권 퇴진은 실질적 가능성이 될 수 있었다. 촛불항쟁 이후 이명박 정부의 악랄한 보복과 공안탄압은 이런 잠재력이 되살아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의 반영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명박 퇴진이라는 목표를 제시할 뿐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할 수단, 즉 아래로부터 대중투쟁과 노동계급의 집단적 행동·파업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쌍용차 투쟁에 대한 금속노조의 연대 파업 등 노동자 투쟁이 번져가는 지금은 좋은 기회일 수 있다.

그 점에서 소통과 혁신 연구소의 민경우 운영위원이 “제도권 정당이 이런 류의 선언적 천명을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주노동당의 이명박 퇴진 선언을 비판한 것은 유감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를 ‘응징’ 할 기회”

는 “2010년 6월의 지방선거”라며 “전술적 공세기 이외에는 거리에 나오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그러나 분노를 행동으로 분출하며 힘을 키워나가지 않은 채 선거만 대비하다가 오히려 그 잠재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

지금 우리의 과제는 “촛불 100일 된 정권의 정치적 생명줄을 끊어놓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조중동의 견고한 아성에 균열을 만든 ... 대중의 힘”(〈PD수첩〉김은희 작가)을 불러내는 것이다.

전지윤 기자 | ratm71@left21.com



이명박에 맞선 대학생들의 광범한 단결이 시작되다

지난 6월 22일, ‘MB심판, 민주회복을 위한 대학생 행동연대’ (이하 대학생 행동연대)가 발족했다. 현재 대학생 행동연대는 전국 34개 대학의 학생회와 30여 개의 종교단체·문화단체·동아리·대학생 정치단체 등이 가입해 있다.

‘대학생 다함께’도 대학생 행동연대에 가입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지난 촛불 시위에서 ‘고대녀’로 알려진 ‘대학생 다함께’의 김지윤 동지는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이원기 의장과 함께 대학생 행동연대의 상임대표를 맡게 됐다.

이명박은 역겹게도 ‘중도실용’, ‘친서민’을 내세우면서 부자 정책 밀어붙이기와 공안탄압에 더욱 열심이다. 이런 때에 대학생들이 여러 차이를 뛰어넘어 함께



6월 26일 대학생행동 기자회견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대학생 행동연대에 주요 학생운동 경향인 ‘전국학생행진’이 불참을 결정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전국학생행진’은 대학생 행동연대가 이명박 반대를 표방하는 것이 운동의 핵심 과제를 잘못 짚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제 위기 고통을 서민에게 전가하고 저항을 억누르기위해 민주주의 역행을 일삼는 이명박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 이명박 반대가 사회 구조가 아닌 특정 개인에 대한 반대일 뿐이라는 식의 시각은 운동의 진정한 성격과 잠재력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것이다.

한편, 대학생 행동연대가 논쟁 끝에 단체명과 주요 요구를 “이명박 퇴진”이나 “MB OUT”이 아닌 “MB 심판”으로 정

한 것은 아쉽다. NL 경향의 주도적 활동가들 다수는 퇴진에 대한 분명한 주장이 광범한 단결을 해친다는 압력을 받은 듯하다. 그러나 “이명박 퇴진”이야말로 지난해 촛불은 물론 올해 거리 시위에서도 가장 인기있는 구호였다. 학생들이 앞장서서 속 시원하게 진보적 대중의 열망을 공공연히 표방하며 투쟁을 건설해 나간다면 더 좋을 것이다.

1987년 6월, 학생들의 용기와 투쟁이 분출구를 마련하고 끝내는 7·8·9월 노동자들의 거대한 저항으로 이어진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대학생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학생 다함께’는 대학생 행동연대와 함께 앞장설 것이다.

서법진 ‘대학생 다함께’ 정치위원, ‘대학생 행동연대’ 공동상황실장

4대강 ‘살리기’ 지칠 줄 모르는 MB의 삼질 본능

6월 29일 이명박은 라디오 연설에서 “1996년 15대 국회 때” 처음 대운하 건설을 제안했다며 “대운하가 필요하다는 믿음에는 지금도 변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기 내에는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사실 전체 예산이나 강바닥 준설 규모 등을 비교해 보면 대운하와 ‘4대강 살리기’의 차이는 한강과 낙동강을 잇지 않는다는 것뿐이다.

대운하 건설에 반대해 온 서울대학교 김정욱 교수는 정부의 거짓말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대운하 안 하겠다고 한 다음에 이걸 ‘4대강 하천 정비’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천 정비 97퍼센트 이상 끝났다고 해 놓고 왜 일을 벌이냐고 비판하니까 다시 ‘4대강 살리기’라고 이름을 바꾼 거거든요.”

김정욱 교수는 ‘4대강 살리기’가 낱을 끄적한 환경 파괴를 비판했다.

“강을 근본적으로 다 갈아 엎어버리겠다는 건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낙동강 바닥 준설량이 4억 4천만 입방미터를 파내더라구요, 그걸 계산해 보니까 폭 20미터 깊이 6미터를 파더라도 3백60킬로미터를 파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구 상류 쪽을 보면 갈수기에 평균 수심이 50센티미터밖에 안되거든요. 지금은 안동에서 바다까지 내려가는데 한 20일 정도면 내려가는데 수심을 5미터로 만든다고 하면 10배나 더 길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댐(수중보)까지 건설하면 물이 고여 쉽게 썩겠죠.”

가뭄과 홍수를 막기 위한 대책이지만 이것도 설득력이 없다.

“시골 마을에 가보면 거기에는 상수도도 안되어 있어서 물이 좀 부족합니다. 이런 데에 물을 잘 공급할 수 있도록 상수시설을 해주면 됩니다. 홍수 나는 것도 주로 큰 강이 넘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산사태가 나면 시골 마을의 계곡이 넘치던지, 이렇게 나기 때문에 빗물을 잘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해주면 됩니다. 강바닥을 파고 토목 건설하는 사업, 이것이 물을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수질을 개선하려면 오염 물질 배출을 막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은 상수원 상류 지역의 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는 완화하면서 강을 살리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명박은 자신이 처음 대운하 계획을 제안했다면 바로 그 15대 국회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격언이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장호중 기자 | rednuc@left21.com

릴레이 시국강연회 1탄

이명박의 언론장악,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연사 :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시간 : 7월 7일(화) 오후 6시 30분
장소 : 고려대학교 경정대 205호
주최 : MB심판, 민주회복을 위한 대학생 행동연대

http://mboutuniv.com

민주노동당 2009 정책당대회

“이명박 퇴진”과 계급연합 전략을 동시에 채택하다

6월 20~21일에 민주노동당 2009 정책당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서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퇴진 운동”을 선언했다. 선언문 초안의 기초는 이명박 “심판”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을 이대로 뒤서는 안 된다는 정서가 당대회를 압도했다. 그래서 최종 선언문은 “이명박 독재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물론 일부 대의원들은 선출된 정부의 임기 중 사퇴 요구에 부담을 느꼈다. 민경우 <통일뉴스> 전문기자(이하 존칭 생략)가 당대회 직후에 쓴 글(‘이명박 정부 퇴진론은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이 정확히 그런 부담감을 보여 준다.(막상 당대회에서는 공개적으로 이명박 퇴진 요구를 반대한 대의원은 없었다.)

민경우는 이명박 퇴진이 실제 가능하려면 “하나는 대통령 탄핵을 통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전민항쟁”인데, 둘 다 비현실적이라고 한다. 전자는 한나라당이 국회 다수파이기 때문이고, 후자는 “현정 질서에 대한 존중감이 상당 부분 안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정 질서를 뛰어 넘는 전민항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통일뉴스> 2009년 6월 27일치)

따라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부를 “응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중운동은 불필요한 과격한 구호를 자제”하고 “지금은 구체적인 실물적인 이해를 걸고 실질적인 성과물을 얻어야(그런 면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학자금대출이자지원조례 등은 좋은 사례이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이명박 퇴진 운동 선언은 더 넓은 범위에서 끓어오르는 이명박 반대 정서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한 것이었다. 이미 천주교 사제단들과 목회자들이 사실상 이명박 퇴진을 요구했다.

이때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선언적 천명”을 일단 해야 한다. 모름지기 정치적 입장 천명이 운동 건설의 출발점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랬을 때, “이명박 사과”는 대중 정서에 한참 뒤처지는 것이고, “이명박 심판”은 결국 1년 뒤 선거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이며, “이명박 불신임”은 운동의 요구가 되기에는 너무 모호한 정치적 수사일 뿐이다.

무엇보다, 운동이 카드수수료나 학자금대출이자 같은 즉각적·부분적 문제에 머문다면 다양한 이유로 형성되고 있는 대중의 반이명박 정서를 정치적으로 수렴시키지 못할 것이다.

많은 대의원들이 제도적 틀(“합법주의”)에 갇히지 말고 “민심”을 대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그래서 옳다.

민주당과 선거연합

그렇다면 민주노동당이 이명박 정권 퇴진을 위해 어떤 전략을 채택할 것이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민주노동당은 계급 협조주의 전략을 확정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지역의 실정과 조건에 맞게 올바른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선택적 반한나라당 정책연합·선거연합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하지 않는다’는 지난 2월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민주당과 사안별 공조를 넘어 전략적 연합으로 항할 여지를 열어 놓은 것이다. 일부 대의원들은 연립정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2012년 민주당이 집권하는



2009년 6월 21일 민주노동당 정책당대회

사진 제공 민주노동당 온라인 뉴스팀

것도 “진보적 정권교체”라고 주장하는 대의원도 있었다.

물론 민주노동당은 진보정치세력의 대연합도 추진하기로 했다. 진보대연합은 이명박에 맞서 진보 진영의 결집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은 한국진보연대 강화를 동시에 결정했다. “한국진보연대의 시군구 조직 건설에 당의 지역위원회가 견인차 구실”을 하고, “현재의 한국진보연대가 전체 민중진영의 투쟁 조직들을 다 포괄하고 있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이 역할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원리적으로는 한국진보연대 강화와 진보대연합이 병행될 수 있겠지만, 구체

적 현실에서는 두 과제 사이에 모순과 긴장이 존재한다. 진보연대 강화의 핵심은 민주노총의 진보연대 가입과 서울에서 진보연대 건설이라 할 수 있다. 진보연대가 자주파의 정치적 재결집체로 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시도는 진보진영 내에서 자주파의 패권 행사로 이해될 소지가 크다. 그리 되면 민주노동당의 진보대연합 제안은 그 진정성을 크게 의심받게 될 것이다(올해 초 민주노총 내 자주파가 추진한 민주노총의 한국진보연대 가입은 민주노총 내에서 정치적 충돌과 분열을 격화시켰고 그 결과 커다란 정치적 양극을 남겼다). 그래서 일부 자민통 활동가들조차 진보연대 강화가 진보대연합 건설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반대했던 것이다.

이런 구체적 맥락 때문에 민주노동당의 진보정치세력연합 실현 노력 다짐이 다소간 의례적이고 원론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민경우도 현 지도부가 이명박 퇴진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단결이 필요한데, 오히려 “선명성을 과시하는 노선과 행동”을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진보대연합의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한 데다, 무엇보다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추진하면 그 구도에 진보신당 등 다른 개혁주의 경향의 진보 세력들도 빨려 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한국진보연대 강화는 이른바 민주대연합에서 자주파의 헤게모니 확보를 위한 전제 조건인 셈이다. 이런 구상에서는 진보대연합에 대해 종파적 입장을 취하기 쉽다. 결국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계급 간 협력을 위해 계급 내 단결을 희생시킬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이 구상이 바로 “진보적 민주주의” 전략이다. 내가 <레프트21> 7호에서 지적했듯이, “진보적 민주주의”의 핵심은 계

급 협력주의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당의 기치”로 설정하기 위해 반자본주의·사회주의 “기치”를 사실상 폐기했다.

“진보적 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자주적 민주정부가 민주노동당의 당면 목표가 된 것이다. 특별히 반자본주의적인 투쟁과 노동계급의 자주적 행동은 부차적 요소가 돼 버렸다.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통과한 “8대 민생정책”이 현재 경제 위기의 규모와 강도에 비춰 봤을 때 온건하거나 불충분한 것도 이와 관련 있는 듯하다. 부분적으로 “국회에서 입법 가능한 것을 선택”한 이정희 정책위의장의 온건 노선도 반영된 것 같다.

그 결과 지난 2월 중앙위원회 때 사업과제에 포함돼 있던 은행 국유화가 빠졌고(서민은행 설립으로 대체됐다), 부도 기업에 대한 국유화 조처는 여전히 의제에 오르지도 못했으며(쌍용차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에 반대해 공적 자금 투입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생태 정책에서는 기후 변화 대응은 “엄두도 못낸 채” “빗물로 마을 살리기”가 채택됐다.

물론 지난 10년에 비해 민주주의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부상한 것은 맞다. 그리고 운동은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적 탄압을 저지하고 정치적 자유를 수호해야 한다. 그 점에서 민주주의 문제는 운동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그렇다고 이명박을 반대하는 운동이 좀더 민주적인 자본주의 정권 수립을 목표로 하는 민주 변혁 전략을 채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민주주의 혁명은 객관적으로 자본주의 경제 체제와 의회 공화국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조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된다. (반)봉건적 계급이 여전히 생산수단을 통제

하고 국가를 형성하며 노동계급이 너무 취약해 권력을 잡을 수 없어 부르주아지가 구질서의 주요 반대파로 돼 있는 조건 말이다. 고전적 부르주아 혁명 — 17세기 영국, 18세기 미국과 프랑스 — 이 이런 조건에서 일어났다. 이 혁명들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정치적 상부구조의 민주적 변형이 아니라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경제적·사회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절정에 달했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 구조는 농민이 다수였지만 노동자가 주도해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킨 1917년 러시아의 그것보다도 훨씬 더 발전했다. 한국은 대규모 노동계급이 존재하는 자본주의 나라다. 한국에 봉건 지주 계급은 없다. 즉, 한국 국가는 자본주의 국가다.

민주당은 (불충분하긴 하지만) 부르주아 자유주의 정당이지만 그들이 대면하고 있는 것은 (반)봉건 국가가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똑같은 배경의 계급이 운영하는 자본주의 국가와 대면하고 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갈등은 계급 분할이 아니라 정치 전략의 차이에서 비롯한다. 두 세력이 왕왕 쉽게 타협에 이를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진보적 민주주의” 전략은 자유주의 부르주아 분파와 협력을 위해 반자본주의 전략을 의도적으로 기각한다.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진보적 민주주의는 “사적 소유와 집단적 소유가 병존하는 등 생산수단 소유의 다양한 형태를 지향한다.”

그러나 모든 진보 운동이 이명박 정부를 주적으로 삼고 있고, 바로 이 정부가 자본가의 이윤과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요구와 반자본주의 요구의 결합이 정말 불가능할까? 민주노동당은 그렇다는 결정을 내린 셈이다.

이 때문에 민주노동당 내 반자본주의자들은 장차 운동을 혼란에 빠뜨릴 위험성이 있는 결정을 — “진보적 민주주의” 채택, 민주당과 선거연합, 한국진보연대 강화 등 — 에 대해 반대 주장을 굽힘 없이 적극 개진했다.

그런데도 박경순 새세상연구소 부소장은 당의 방침이 “전 당적 토론과 합의로 결정”됐다고 평가했다(‘단결과 전진’의 한마당으로 어우러진 제1회 정책당 대회). 소수파의 이견을 간단히 무시하는 평가다. 수정안이 8개나 제출됐고, 6백26명의 대의원 중 1백59명이 지도부의 원안에 반대했다(4백67명이 찬성했다). 반대 이유들은 상이했지만 말이다.

처라리 정성희 민주노동당 2010위원회 상임위원의 평가가 솔직하다. 그는 “당 내부의 통일단결과 진보정치대연합에 장애가 될까 봐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온 당의 이념과 가치를 ‘당의 기치’로 제목을 바꾸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진보적 민주주의’로 바꿔치기하는 일부 정파의 기만적 수정주의와 합종연횡으로 민주노동당 스스로 ‘NL당’ ‘자주당’이 돼 버린 것입니다.”(‘자주민주주의와 제1차 정책당대회’)

요컨대,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정권 퇴진 운동을 선언함으로써 급진적 면모를 과시하는 한편, 장차 심각한 정치적 혼란과 시련을 겪을 정치적 선택 — 민주 변혁 전략 — 도 동시에 내렸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 민주노동당의 이명박 정권 퇴진 운동을 적극 지지하는 동시에, 그 운동의 성공을 위해 전략 논쟁도 아울러 수행해야 한다.

‘민주주의 수호와 한국 사회의 변혁’ 기사에 대해

이 기사는 최근 뜨겁게 제기되고 있는 민주주의 운동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몇 가지 의문과 아쉬운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일부 급진좌파들이 ‘절차적 민주주의는 완성’ 됐다며 민주적 권리 옹호를 위해 투쟁의 폭을 넓히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경향은 문제다”라는 부분에서 그 일부 급진좌파 세력의 정확한 주장을 언급하며 비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 같다.

최근 급진좌파들이 이명박 정부의 권위주의적 억압과 민주주의 후퇴라는 현실 앞에서 이전처럼 노골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됐다고 주장하지는 않는 듯하다. 특히 일부 ‘초좌파’ 경향의 급진좌파들도 사회주의노동자연합에 대한 국가보안법 이용 탄압 이후 이명박 정부의

‘공안탄압’에 저항해야 할 필요성을 전보다 공감하고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 문제를 과소평가했던 급진좌파들과 입장이 비슷했던 손호철 교수도 “이명박 정부 들어 ‘재권위주의화’가 일어나고 있다. ... 사상의 자유(사노련 사건), 언론의 자유(YTN노조위원장 구속, ‘PD수첩’ PD 체포 등), 표현의 자유(미네르바 구속), 집회의 자유(촛불시위 구속 등)가 후퇴하고 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최 6월 민주항쟁 22주년 학술대토론회 자료집)며 이전 입장을 조금 수정하기도 했다.

실천에서 민주적 권리 옹호를 위한 투쟁을 소홀히 하는 일부 급진 좌파들의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최근의 입장 변화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면서 비판했으면 한다.

둘째, 민주당이 급진적인 정치적 요구나 사회·경제적 요구에서는 노동계급과

대립하는 편에 설 것이라며 민주당의 한계를 잘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나 권위주의 정권 퇴진 같은 급진적인 정치적 요구에서는 기회주의적으로 ‘편승’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사회·경제적 요구는 민주당의 주요 계급적 기반인 자본가 계급과의 직접적 충돌을 의미하기 때문에 노동계급과 완전히 대립할 수밖에 없다.

하나 급진적인 정치적 요구는 대중적 운동의 압력에 밀려 왼쪽 깡뻥이를 켜면서 정권 장악을 위해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따라서 ‘국민전선’이 형성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 물론 그들은 불철저하고 운동을 제한하고 통제하려 할 것이라는 최미진 기자의 전반적인 주장은 옳다.

전주현

민주주의 혁명을 위해서는 ‘악마’와도 연대할 줄 알아야

지난호 독자편지 ‘민주당과의 전략적 동맹 반대를 강조했어야’에 이견이 있다. 진보진영이 여타 정치세력과 언젠,어떻게 연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연대의 철학과 원칙’의 재확인이 필요하다.

일부 소부르주아적 조급증에 걸린 분들의 보수야당에 대한 알레르기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현 시기 우리는 반MB 전선을 강고히 구축해 MB정권을 철저히 고립시키며, 보수세력마저도 MB로부터 확실히 이격

시키는 두터운 민주전선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향후 민중의 정치적 진출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주체와 토대를 굳건히 만들어낼 것이며, 보수정치세력의 정치적 기반을 균열시키는 정치적 시한폭탄을 심는 전술이다.

우리는 반MB 전선을 굳건히 하기 위해 악마와도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처절한 각오가 없이는 MB를 걸단코 거꾸러뜨릴 수 없다. MB를 거꾸러뜨리는 데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권력의 침몰은 전 사회적 변혁을 촉발시키는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초래할 것이며, 반드시 진보세력은 이 권력의 진공을 초래할 ‘일대 사변’을 주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정파의 이익이 아닌 조직의 이익이 아닌 전 민중의 작은 진보를 이루어낼 수 있는 길이라면 악마와도 굳건히 손잡겠다는 처절한 시대적 각성이 요구된다.

revolution

화물연대 파업을 돌아보며

화물연대는 6월 11일 파업에 돌입했고, 6월 15일 새벽에 이를 철화했다. 이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있고 허탈해 하는 활동가들도 많다고 들었다. 그러나 화물연대 투쟁은 단지 6월 11일~15일이라는 파업 기간만 바서는 안 된다. 지난해 10월 경총 등이 노조법 위반이라며 화물연대의 운수노조 탈퇴를 종용한 것부터 박종태 열사의 죽음 직후 확산된 투쟁까지 함께 봐야만 한다.

애초 대한통운은 이명박 정부의 등장에 의기양양해서 수수료 인상 약속 파기와 조합원 대량 해고 이후에도 협상조차 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5월 16일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총회를 마치고 경찰의 봉쇄를 뚫고서 사측 정문 바로 앞까지 진격하고 파업을 예고하는 것을 보고 겁을 집어먹은 결과, 대한통운은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가기 전인 6월 10일 박종태 열사 죽음의 계기가 된 해고 노동자들을 전원 복직시키고, 모든 고소·고발·가처분신청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단체행동권 쟁취와 직결되는 화물연대 인정을 요구하며 파업을 단행했다.

박종태 열사의 죽음 전부터 이명박 정부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탄압하기 위해 건설기계노조와 화물연대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려고 시도했던 만큼, 부분적 양보에 만족하지 않고 단결권 쟁취를 위해 파업을 밀어붙인 화물연대의 결단은 옳은 것이었다.

그러나 파업을 성사시키는 것은 만만치 않은 과제였다. 무엇보다도 파업 돌입 전부터 상당한 양보를 얻어낸 성과가 거꾸로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많았다. 사실상 단체행동권을 인정하라는 대정부 요구사항만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경제 위기 때문에 화물량이 줄어든 것과 이명박 정

부의 광복한 탄압 역시 파업 효과를 키우는 데 커다란 걸림돌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선은 다르더라도 같은 대상(이명박 정부)을 놓고 싸우고 있는 촛불 진영과 공동 행동을 모색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그런 점에서 화물연대가 5월 30일에 범국민대회와 별도로 여의도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6월 10일 시청에서 열린 범국민대회에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참가하지 않은 것, 그리고 6월 13일 상경투쟁 계획을 번복한 것은 큰 아쉬움을 남긴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처럼, 조합원들이 조직적으로 참가해서 파업의 정당성을 대중에게 알리고 지지를 호소했더라면 파업 참가자들의 자신감을 높이는 동시에 더 많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옳은 결단 그러나 아쉬운 전술

나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는 못하지만, 비조합원 참여가 예년보다 낮은 상황에서 파업을 어떻게 성사시키고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전술 또한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보수 언론과 정부, 사측은 비조합원들에게 파업이 자신들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고, 대부분의 정점은 합의에 도달했는데 지엽적인 차이 때문에 화물연대가 파업을 강행한다는 인상을 주려 했다. <레디앙> 같은 진보 언론은 이에 현혹돼 “도무지 이해 안 되는 화물연대 파업”이라는 글을 편집자 추천 기사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분열책동에 맞서기 위해, 정부가 계속 어기고 있는 표준요금제 도입을 전면에 내세우거나, 다른 특수고용노동자들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정치적 요구안을 제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아쉬움은 파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크

게 나타났다. 만약 주·객관적 조건을 따져봤을 때 파업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됐다면, 분노를 유지하고 규모와 힘을 과시하며 파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퇴각전술’을 제시했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지금처럼 잘 싸워서 많은 양보를 얻고도 진보진영 일부로부터 “이런 게 뭐냐”라는 불공정한 평가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도부가 배신적 타협을 한 것은 결코 아니므로, 지도부를 문책해야 한다는 류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보다는 급변 파업의 경험 미숙을 돌아보며, 저들의 흑색선전을 반박하고 다음 투쟁을 준비하는 것이 더 맞다고 본다.

<레프트21> 기사에 대해서도 몇 마디 하겠다. <레프트21>은 보수 언론의 파업 비난과 파업 지지가 적다는 악선전에 맞서 파업의 정당성을 알렸다. 일부 좌파 언론이 “원직복직을 비롯한 많은 문제들에 대해 거의 의견이 접근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명주체의 문제로 합의문 전체가 파기되는 웃지 못 할 상황 ... 정부 차원에서 화물연대의 파업을 유도하여 이를 철저히 짓밟겠다는 의도”(레디앙)와 같은 엉터리 전망을 내놓은 것보다 정치적으로 백 배는 더 옳은 것이었고 이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투쟁을 방어하고 고무하는 것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승리를 위해 필요한 전술과 과제를 제시하는 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었다. 7호 논설에서 6월 10일 범국민대회 참가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을 제외하면, 화물연대 관련 기사들은 사측과 정부에 대한 폭로와 노동자들의 투지를 전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5호에서 쌍용차 점거 파업의 필요성을 주장했듯이, 분석을 통해 구체적 과제를 제시하는 기사가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김종환

이란 저항 운동은 미국 제국주의자들에게 이롭지 않다

이란 저항 운동이 반미를 표방한 아마디네자드에 항의한다고 해서 미국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개혁파의 영향력도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다. 게다가 이 운동을 통해 이란이 민주화된다면 중동 민중이 민주주의를 이룩하지 못할 것이라던 미국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증이 될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이란의 지금 상황을 이용하

려 하지 않을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는 이란 문제에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꽤 소극적이고 조심스럽고 굼뜨다.

국제적으로 헤즈볼라, 베네수엘라와 같이 이란 정부의 지원을 받았던 저항세력이나 좌파들이 ‘적의 적은 친구’라는 식의 태도로 이 운동을 지지하지 않는 태도는 큰 문제다.

이나라

이란 좌파의 구실이 중요하다

<조선일보>는 1979년과 2009년을 단순비교하면서 지금이나 그때나 마저 운동의 주요 세력을 단순히 상인계층이나 학생과 지식인으로만 한정하고 쟁점도 매우 축소시켜 도식화한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 않다. 1979년 혁명이나 2009년 투쟁 모두 권위주의 통치가 경제 위기 시기와 맞물려 노동계급의 저항을 낳았다.

그러나 1979년 이란 혁명은 노동계급의 권력 장악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옛 지배계급이 너무 취약해서 경제 위기와 아래로부터 반란에 부딪혀 권력을 유지할 수 없었지만, 노동계급은 운동을 지도할 수 있는 독자적 조직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럴 때 인텔리겐차 집단이 사회 전체의 문제를 해결할 사명감을 느끼고 권력 장악에 도전할 수 있다고 [영국 사회주의

자] 토니 클리프가 평한 바 있다.

호메이니를 위시한 인텔리겐차 역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는 그대로 남겨두면서도 자본의 소유와 통제를 혁명적으로 재조직하기 시작했고 사의 측근이 소유했던 대규모 자본을 자신들이 통제하기에 이른다. 국가와 자본을 독자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주요 사회 계급 사이의 줄타기를 계속했다. 좌파 조직과 부르주아 조직을 번갈아 공격했고 그러면서도 좌파 이미지를 유지했다. 성직자들의 권력 장악은 혁명 이후 국가 권력의 공백을 반영한 것이었다.

1979년 경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좌파들의 구실이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이란 좌파들의 움직임을 신문에서 더 다뤄 줬으면 좋겠다.

최윤진

간호사들이 수당을 야비하게 가로챈 병원과 싸워 이기다

나는 고대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다. 올해 초 평소 잘하지 않던 월급 계산을 해 볼 기회가 있었다. 계산하던 중 “심야수당”이 맞지 않았다. 재차 따져 보니 오후근무시 발생하는 심야수당이 누락됐던 것이다. 병원은 간호사뿐만 아니라 3교대 근무자들 전원에게 오후에 발생하는 “심야수당”을 수년간 교묘하게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다.

노동조합은 3교대 간호사들에게 이 사실을 즉각 폭로했다. 간호사들은 “눈 뜬 채 코 베인 심장”이라며 “기가 막힌다”고 토로했다.

곧바로 ‘이브닝 심야수당 청구 투쟁’을 시작했다. 노동조합의 항의에 병원은 “왜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문제 삼느냐”는 식이었다. 1차적으로 약 1천 명의 간호사들이 의료원에 신청을 했다. 그사이 병원은 지급하지 않던 심야수당을 제대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체불된 3년치 임금까지 받아내기 위해 5차례 공문 발송, 병원장 면담 신청 등 투쟁 수위를 높였다. 또한 2차적으로 간호사들과 함께 노동부 진정과 민사소송까지 감당한 법적 투쟁까지 결의했다. 병원의 탄압이 심할 수 있으니 조합원만 법적 투쟁을 하자는 논쟁이 있었지만 더 큰 단결을 위해 조합원·비조합원 구분 없이 조직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간호사들은 꼭 받아내자는 분위기였고 약 7백 명이 동참했다.

법적 투쟁이 실질적 행동으로까지 조직되다보니 병원은 3년치 체불임금을 모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간호사들은 승리했다. “하나까 되네요”, “정말 기쁘다”며 기뻐했다. 싸우면 된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경제 위기에 노동자 착취가 강화되는 요즘, 간호사들의 단결과 단호한 행동이 만든 큰 성과다.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 조직부장 박미혜

“좀비 자본주의를 이해하려면 마르크스를 읽어야 합니다”



영국의 계간 사회주의 이론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편집자 **크리스 하먼**은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를 알려면 마르크스주의 사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크리스 하먼의 최신작 《좀비 자본주의》는 “현 위기가 자본주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의미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의 중요한 공헌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읽어야 할” (알렉스 캘리니코스) 책이다. 한국에서도 조만간 번역·출판될 예정이다.

크리스 하먼은 현 세계경제 위기를 마르크스주의 시각에서 분석한 《21세기 대공황과 마르크스주의》(책갈피)의 공저자이며, 다함께가 주최하는 진보포럼 ‘맑시즘 2009’에서 ‘오늘의 세계경제 위기’, ‘오늘의 제국주의’, ‘21세기 노동자계급’ 등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다.



2009년 1월 29일, 프랑스 노동자 2백 50만 명이 참가한 노동조합 집회 “노동자들이 경제위기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

경제 위기에 관한 당신의 책 제목이 《좀비 자본주의》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몇몇 논평가들은 제 기능도 못하면서 주변에 악영향을 끼치는 은행을 ‘좀비 은행’이라고 부릅니다.

좀비 은행은 쓸모가 없지만 정부가 지탱해 주고 있어서 계속 살아 있습니다. 죽은 것이 산 것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저는 ‘좀비 자본주의’가 자본주의 체제의 전반적 특징을 잘 묘사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에서 자본주의가 특하면 위기에 빠지는 이유를 칼 마르크스의 이론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썼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죽은 것이 산 것을 지배하는,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는 체제라고 말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인간 노동의 생산물이 어떻게 인간의 삶과 다음 세대의 삶을 지배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노동자는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할지, 또 그 생산물이 어디에 쓰일지 결정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생산물 그 자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독립적 존재로 보이게 됩니다.

‘좀비 자본주의’는 특히 지금 시기에 사용하기 적절한 용어입니다.

2백50년 전 산업 자본주의가 탄생했을 때, 그것은 매우 역동적인 체제였고 세계 전체로 뻗어 나갔습니다.

자본주의에는 언제나 위기가 따라 다녔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중엽 이후 자본주의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불황들 사이에 호황이 잠깐씩 찾아드는 장기 위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자본가들은 생산 확대에 투자할 동기를 느끼지 못했는데, 투자 대비 수익률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자본가들은 이윤 수준을 유지하려고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는] 대출과 빚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은행과 금융 기관 들은 자신들이 회수할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 줬습니다.

이것이 2년 전 ‘신용 경색’을 촉발했고, 우리는 여전히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주류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이번 위기가 금융 문제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위기는 훨씬 더 깊고, 더 근본적인 체제의 문제를 반영합니다.

마르크스는 위기가 자본주의의 핵심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쟁이 체제의 동력입니다. 그런데 자본가들이 서로 더 많은 시장을 차지하려고 경쟁하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위험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두 가지 조치가 이 경향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노동자들이 임금을 지출해 생산된 상품의 일부를 소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본가들이 이윤을 투자해 공장을 새로 짓는 방법인데, 이 과정에서 철·철강·석유·전기 등 이미 생산된 상품들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수요의 원천 중 하나만 무너져도 경제가 위기로 빠질 수 있습니다.

과잉생산은 체제에 긴장을 유발합니다. 상품이 팔리지 않으면 그 상품을 생산한 공장들의 이윤이 줄고 노동자들은 해고됩니다. 해고된 노동자들이 다른 공장에서 생산한 상품을 사지 못하게 되고 다른 공장의 노동자들도 해고되면서 문제가 더 커지게 됩니다.

이번 위기에 정부들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풀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다국적기업과 은행들은 자신들의 부채 규모를 비밀에 붙이는데, 경쟁자들이 자기들보다 유리해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본가들은 자기들의 수익을 과장하는데, 자기들의 주식 가치가 오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제의 수익이 얼마인지, 손실이 얼마인지 그 실체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부들은 돈을 풀어서 큰 구멍을 메우려고 하지만 그 구멍이 얼마나 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조만간 정부들은 그 돈을 회수하려고 애쓸 텐데, 은행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빼내 가려 할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 몇몇 정부는 경쟁국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이고, 한동안 중대한 고비가 닥치는 것을 늦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트비아 같은 동유럽 국가들은 이미 심각한 상태입니다.

영국은 그 둘 사이에 있습니다. 영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류 경제학자들 다수는 세금을 대거 올리든지, 공공 서비스를 축소하든지, 아니면 둘 다 하든지 해서 영국 정부가 은행에 쏟아 부은 돈을 회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보수당과 노동당은 공공 지출을 얼마나 삭감해야 할지를 놓고 논쟁중입니다. 보수당은 공공연하게 삭감하자고 주장하지만 노동당은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삭감하려 합니다.

이번 경제 위기는 지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자유 시장 정책에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신자유주의는 노동자를 공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주로 이용되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자유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들은 계속해서 대기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원은 언제나 뒷구멍으로 이루어졌죠. 그러나 오늘날 정부들은 대놓고 기업들을 지원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 덕분에 1970년대 위기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위기가 노조나 석유수출국들 때문이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기 더 쉬워졌습니다. 지금 대다수 사람들은 은행이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 중 하나라고 여깁니다.

그렇다고 체제에 반대하는 주장이 자동으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익 신문들은 매일 난민, ‘복지 기생자’나 이주노동자를 비난합니다.

‘사장과 노동자는 한 배를 탔다’는 생각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런 생각은 지난 ‘호황’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혜택을 얻었으니 이제 불황의 고통도 함께 분담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확실히 효과를 냅니다. 예를 들어 영국항공공조조합의회(BALPA)의 조종사 노동조합은 항공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시간을 연장해서 회사를 돕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은 호황기에도 혜택을 얻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럭저럭 살기 위해서라도 많은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수세적이 되고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

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 조건이 나빠지는 데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사회주의자는 체제에 반대하는 주장을 펼치고 모든 노동자들의 단결을 주장해야 합니다. 투쟁을 벌일 때 노동자들이 그런 주장에도 귀를 기울일 가능성이 커지고 이 사회가 계급으로 나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위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 사상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고 있으며 학자들 사이에서도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나 〈이코노미스트〉같은 주류 경제학 정기간행물들은 관심의 초점을 자유 시장 예언에서 국가 개입을 주장하는 존 메이너드 케인스로 옮겼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들은 마한가지로 마르크스에 대해서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본주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려면 마르크스를 읽어야 합니다.

지금 경제 회복의 조짐이 있습니까?

최근 몇 주 동안 꽤 많은 논평가들이 이제는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얼마나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지 보여 줍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주가는 20퍼센트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50퍼센트 폭락했고 그 전의 상태로 돌아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나 주식에 투기해서 쉽게 돈을 벌고자 한다면 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변곡점’에 다다랐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침체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경제가 하락하는 속도가 줄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체제에 쏟아 부은 막대한 돈이 과연 위기를 끝낼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사 경제가 회복하기 시작하더라도 사람들은 한동안 그 효과를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컨대 실업률 감소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지배자들은 위기의 근원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감기에 걸려 해열제를 먹었다면 몇 시간 동안은 두통이 사라질 테지만, 얼마 후에는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번 위기에서 빠져나오더라도 기업주들은 더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조건을 창출할 것입니다.

번역 차승일

기획 연재

경제 위기 대안 논의 ⑤ — 사회적 기업

시장도 국가도 아닌 대안?

신자유주의 시대에 기업의 무한정한 이윤 추구로 복지·환경·노동조건 등이 무자비하게 파괴되고, 제3세계에서는 엄청난 대중이 가난·질병으로 고통받는 현실을 보면서, 몇몇 사람들은 ‘사회적 기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함으로써 사회를 좀더 살 만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이런 정서는 이윤 추구에만 골몰하는 기업에 대한 대중의 반감을 표현한 것이다.

우선 이런 종류의 개념으로 널리 퍼져 있으며, 기업들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다.

기업이 환경 보호, 노동조건 개선, 지역 사회 지원에 나서 이윤 추구와 사회적 기여를 조화롭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CSR은 기업의 마케팅 전략과 구별하기 힘들고 이를 어기는 기업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약점이 있다.

“또 하나의 가족”을 표방하며 CSR에 가장 많은 돈을 쓰는 삼성은 악명높은 ‘무노조 경영’으로 노동자들을 감시·탄압하고, 편법 상속으로 엄청난 액수의 세금을 안 내고, 정관계에 천문학적 인 돈을 뿌리며 ‘장학생’들을 관리해 한국 사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금호그룹은 “아름다운 기업”을 표방하며 ‘사회공헌’(즉 기부)에 골몰해 왔다. 그러나 그 계열사인 대한통운은 운송료 30원 인상 약속을 지키지 않고 노동자들을 해고해, 결국 박종태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런 가증스런 행태들은 단지 한국 기업들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 후덕한 기부로 ‘좋은 기업’ 이미지를 얻었던 미국의 거대 에너지 회사 엔론은 2001년에 회계부정으로 수백억 달러의 손실을 내고 파산하며 추악한 실체가 드러났다.

CSR은 기업 이윤을 침해하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약점이 있다. 더구나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 기업들은 “CSR를 사치로 인식하거나, 기존에 실행해 오던 CSR 프로그램마저 후퇴시키고 있는 실정”(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영호 이사장)이다.

착한 일 하면서 돈도 번다?

한편, 좀더 본격적인 사회적 기업 논의는 분명 CSR과 구별된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 개념은 주창자들 스스로 모호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힘들다.

사회적 기업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기업이 단순한 자선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정부, 기업, NGO와는 구별되는 “제4섹터”인 사회적 기업은 “착한 일을 하면서 돈도 버는 기업”이라고 정의된다. 즉,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스스로 수익을 내기 위해 기업과 마찬가지로 혁신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사회적 기업을 소개하는 책이나 자료들을 보면, 주요 사례의 상당수는 자선단체들이다. 예를 들어, ‘룸투리드(room to read)’는 제3세계에 학교 2백 곳과 도서관 3천 곳을 지어 준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으로 소개된다. 특히 창업자 존 우드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고위 임원 출신이라 더 널리 알려졌다.

존 우드의 ‘혁신’은 자신의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정면적으로 더 많은 기부금을 모으고, 도서관 건설에 지역 주민을 동참시킨 것이다. 그러나 ‘룸투리드’는 기업이 아니며 기부금이 없으면 운영될



캄보디아에 있는 ‘룸투리드’ 도서관 사회적 기업으로 널리 알려졌다나 기부금이 없으면 운영될 수 없는 자선단체다.

수 없는 자선단체다.

이익을 추구에 제 발로 선다는 사회적 기업 사례에 흔히 ‘열정적인’ 자선단체가 포함되는 이유는 사회적 기업이 기본적으로 기부나 자원봉사, ‘선한 소비’, ‘사회책임투자’ 등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에서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으로 알려진 곳들을 봐도 그렇다. 재활용, 자원봉사, 공정부역 등과 연계된 ‘아름다운 가게’, 장애인을 고용해 쿠키를 만드는 ‘웨캔’, 한국에서 공정부역 상품을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페어트레이드코리아’ 등도 기부나 자원봉사, ‘선한 소비’가 꼭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선 활동이 부딪히는 한계에 똑같이 직면하게 된다. 즉,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일자리로는 전 세계의 가난이나 질병, 실업 등을 완화시키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으로 소개되는

‘마이시4(MYC4)’는 창업 2년 만에 전 세계에서 투자자들 1만 4천 명을 모아 아프리카 각국의 소기업 4천5백 곳에 투자했다. 그러나 투자금은 고작 1백50여 억 원(달러가 아니다!)에 불과했다.

전 세계에서 사회적 기업에 투자한 민간 자금은 2004년 기준으로 채 1억 달러가 되지 않았다. 민간 기업 투자금에 비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 대기업들의 자선기금과 비교해도 새 발의 피인 셈이다.

한국에서도 노동부가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한 2백18개 기업에 고용된 사람은 3만여 명이고, 이들의 당기순이익 합계도 45억 원에 불과했다. 이조차 “정부가 사회적 기업에 사업 기회를 많이 제공했던 영향이 컸다.”(곽선화 부산대 교수)

사회적 기업이 성공적으로 확산되면 규모 확대가 필수일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를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의 주창자들도 인

정하듯이, 외부 투자자를 받아들이면 사회적 기업의 경영 철학을 포기하라는 압력을 크게 받게 된다.

폐자재를 활용해 악기를 만들고 이를 통해 어려운 청소년에게 일자리와 문화 공연 서비스를 제공해 한국에서 성공한 사회적 기업으로 알려진 ‘노리단’도 이런 유사한 압력을 받고 있는데, 이들은 결국 기존 방식을 유지하며 적게 성장하는 걸 목표로 삼았다.

결국 사회의 주류가 될 수 있다는 주창자들의 근거없는 낙관과 달리 사회적 기업은 거대 기업들 사이의 작은 틈새에 머무는 것 이상을 하기 힘들다.

시장을 통한 빈곤 퇴치?

한편, 사회적 기업 주창자들이 사회적 기업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이윤 추구만을 절대시하는 기업에 대한 반감뿐 아니라 비효율적인 관료 기구와 국가 통제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의 주창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환경과 사회를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은, 시장만능주의로도 국가사회주의로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사회적 기업이 새로운 대안이다.”

이는 정부는 비효율적이고 시장은 효율적이라는 편견에 기반을 둔 주장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거대한 관료 기구의 비효율성은 거대 민간 기업이나 심지어 큰 규모의 자선단체에서조차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국가 통제가 비효율적이고 정부 복지가 형편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윤 추구에만 몰두하는 기업들이 정부의 정책과 행동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업이 혼한 자선단체와 다른 부정적 측면은 실업·빈곤·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시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효과를 낸다는 점이다.

기업들은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도록 촉구하면서도, 많은 세금과 복지 확대를 반대하고 복지제도가 자신들의 이윤을 침해하거나 사업 기회를 줄이려 한다면 극렬히 반대한다.

브라질에서 빈농들에게 값싼 전기와 펌프를 제공해 주려던 사회적 기업가는 사업 기회를 빼앗길 것을 두려워한 시멘트·알루미늄 업계의 반발과 그들과 유착한 정부의 방해에 부딪혔고, 이를 겨우 극복했을 때는 전력공사가 민영화돼 실패를 맞볼 수밖에 없었다.

사회적 기업이 혼한 자선단체와 다른 부정적 측면은 실업·빈곤·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시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효과를 낸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수백만의 빈민 여성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무담보 소액 대출(마이크로크레딧)을 제공한 가장 성공한 사회적 기업 그라민은행 등은 빈민들에게 교육과 자금을 제공해 이들이 시장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라민은행의 창업자이며 이를 통해 노벨평화상을 받은 유누스 박사는 “서구의 복지제도가 빈곤 탈출에 방해가 된다”며 복지가 아니라 시장을 통한 빈곤 퇴치를 주장한다.

그러나 모든 빈민이 무담보 소액 대출 방식으로 사업 기회나 일자리를 얻고 빈곤에서 탈출할 수는 없다. 자본주의적 경쟁은 많은 소기업들을 파산시키고, 노동자들을 실업자로 내몰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라민은행이 수백만 명에게 대출해 주면서도 1백 퍼센트에 가까운 상환율을 기록한 것은 지원 대상을 매우 엄격하게 선정할 뿐 아니라 연대보증과 같은 안전장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라민은행에서 대출 받은 여성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중간계급이었다.

사회적 기업은 시장이 낳은 빈곤과 실업, 환경 파괴를 시장을 통해 극복해 보자는 대안이다. 그러나 결국 자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기업이 이윤 추구에 몰두하는 민간 기업들과 경쟁해 승리할 수는 없다.

게다가 사회적 기업의 주창자들은 시장이 효율적이며 정부는 무능하다는 편견을 시장주의자들과 공유하며 그 의도와 상관없이 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나쁜 효과를 내기도 한다.

사회적 기업에 뛰어드는 것보다 사회진보를 위해 더 값지게 열정과 헌신성을 부여하는 방법은 많다. 그것은 대중과 함께 정부·기업에 진정한 개혁을 요구하고 투쟁하면서 시장 체제를 뛰어넘는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강동훈 기자 | kah@left21.com



금호그룹의 ‘사회공헌’ 이런 마케팅 행사 이면에 박종태 열사의 죽음이 있다.

리뷰

우원석 영화칼럼

타인의 고통



지난 한 해 가장 재미있게 본 영화를 말해 보라면 나는 <클로버필드>를 꼽겠다. 이견 순전히 개인적인 취향 때문이다. 거대한 괴물이 나타나 뉴욕을 초토화시킨다는 내용을 다큐멘터리처럼 찍은 이 영화에 돋보이는 주제의식 따윈 없다. 9.11 테러 때문에 생긴 미국인들의 정신적 외상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할 수도 있겠지만 영화가 하도 단순해서 심각한 사유를 하기엔 사실 머쓱하다. 그럼에도 괴수영화를 좋아하는 나같은 사람들에게 이 영화는 정말 짝이다. 아비규환의 뉴욕을 1인칭 시점으로 완성도 높게 찍었기에, 관객들은 마치 자신들이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그래서 현장감이 무척 풍부하다. 이런 영화는 어차피 플러코스터다. 괴수영화 팬으로선, 잘 재현된 대형 참사를 제대로 체험하며 스릴과 공포를 만끽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영화적 쾌감, 즉 재현된 참사를 체험하며 느끼는 쾌감의 본질이 그리 유쾌한 것은 아니다. 가령 <클로버필드>가 진짜 다큐멘터리라고 하자(제작진은 이 영화를 다큐멘터리처럼 보이게 하려고 엄청 노력했다. 그들의 소원을 한번 들어줘 보자). 스크린 위 모든 게 현실이라고 치자. 그러면 관객들은 뉴욕의 참사를 더 생생하게 체험할 것이다. 동시에 그들은 더 흥미로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관객들은 스크린의 현실과 자신들의 현실이 구분돼 있음을 안다. 괴물이 제 아무리 진짜라도 스크린을 뚫고 나올 리는 없다. 그래서 스크린 속의 세계를 엿보는 그들은 공포를 느끼는 만큼 안도감도 느낀다. 그리고 안도감을 느끼면 공포의 대상은 감상의 대상, 즉 자극적인 흥밋거리가 된다. 그러니 결국 본질을 따져 보면, 스크린 속 참사 체험의 흥미는 나와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남의 참사를 안전한 곳에서 구경하며 느끼는 쾌감, 즉 일종의 관음증적인 쾌락이다.

공포와 안도감

이런 관음증적 쾌락이 남의 고통과 비극을 다룬 이미지들, 예컨대 전쟁, 빈곤, 폭력잔인 등을 고발하는 UCC나 사진의 관람행태에도 있을까. 나는 있다고 본다. 물론 이런 이미지들이 지닌 현실 비판의 힘은 대단하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 컷의 사진이나 동영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위력은 크다. 가령 전쟁사진이 처음 대중화된 것은 1936년 스페인 내전 때였다. 사진기술이 발전한 덕분에, 당시 기자들은 삼각대를 꼭 써야 하는 무겁고 큰 구형 카메라 대신 작고 가벼운 카메라를 손에 쥐고 전쟁에 참가했다. 그래서 스페인 내전 사진들은 전부 도중 고통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인류 역사상 최초로 — 이전의 전쟁사진들은 무거운 카메라 때문에 전투 전이나 후의 모습만 담을 수 있었다 — 담아냈다. 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프랑코 정부의 잔인함을 생생하게 체험했다. 반전·반파시스트 운동에도 도움이 됐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다. 이런 이미지들은 어찌 되었든 남의 비극을 대상화한다. 세상의 무엇이든 일단 대상이 되면, 보는 사람 처지에서는 감상의 거리감이 생긴다. 그리고 거리감이 생기면 관음증이 끼어들 여지가 생긴다. 지난해 촛불시위 인터넷 중계를 보자. 중계 사이트 채팅방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네티즌들의 중계 사이트 접속과 댓글 빈도수는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해 고통 받을 때, 즉 강렬해서 흥미로울 때 증가했다. 반대로 집회가 평화로워 시위대가 어려움을 겪지 않을 때 채팅방은 한가로워졌다. 그 많은 네티즌들이 갑자기 다 집회에 나갔기 때문이 아니다. 경찰의 폭력에 직접 노출된 시위대와 달리, 자기 방 컴퓨터 앞에서 안전하게 관람하던 사람들에게는 볼거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오해마시길. 인터넷 중계는 그림자도 있었지만 빛도 분명히 있었다.)

미국의 비평가 수전 손택은 <타인의 고통>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의 마음을 휘저어 놓는 고통스런 이미지들은 최초의 자극만을 제공할 뿐”이다. 맞는 말이다. 최초의 자극은 최초일 뿐, 전부가 아니다. 타인의 고통을 담은 이미지는 현실이 아니고, 그런 이미지를 감상하고 연민을 보낸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지는 않는다. 현실의 고통은 언제나 현실의 행동만이 없앨 수 있다.

우원석
영화감독 / 뉴욕에서 영화 공부를 했고 지금 작품을 준비중이다

《다윈 이후》(스티븐 J. 굴드, 사이언스북스)

다윈주의에 대한 오해를 걷어낸 최상의 과학서



올해는 진화론의 창시자 찰스 로버트 다윈이 탄생한 지 2백 주년이 되는 해다.

최근 다윈 출생 2백 주년을 맞아 출생지인 영국에서는 다윈의 진화론을 재조명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버스광고에 진화론과 창조론을 옹호하는 광고가 경쟁적으로 부착되면서 해묵은 진화론과 창조론 사이의 논쟁이 불붙는 듯 보였다.

고생물학자이자 진화생물학자인 스티븐 제이 굴드는 《다윈 이후》를 통해 진보주의적 진화론을 극복하며 진화론의 대중화를 이끄는 데 기여했다.

굴드는 “다윈에 대한 오해는 1백 년이면 족하다”는 논쟁 글을 인용하면서 다윈의 진화론을 옹호한다.

더 나아가 19세기와 20세기에 문화·사회적 편견 속에서 다윈의 사상이 어떻게 왜곡됐는지를 철저히 파헤쳤다. 또한 사회생물학의 맹점을 다윈의 시각으로 설명하며 진화란 진보가 아니라 다양성의 증가일 뿐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굴드는 인간이 진화의 최고 정점이며 진보된 하나의 증거라고 하는 상식을 비웃는다.

“호모사피엔스인 우리는 기초로부터 시작해 고상한 정점에 이르는 진화의 사다리에서 미리 예정된 최종적인 결과품이 아니다. 단지 무수하게 가지치기를 해 온 진화의 관목에서 제대로 자라는 데 성공한 하나의 가지에 불과한 것이다” 하고 주장한다.

이어 “인간과 다른 동물 사이의 연속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우리들의 자세와 다른 동물에 대한 인간의 우월성을 확신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찾고자 하는 우리의 열렬한 노력”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커다란 벽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한다.

생물학적 결정론

인간의 행동을 선천적인 생물학적 특성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던 과거에는 인간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아니 편리했다고 말하는 것이 옳겠다.

그러나 20세기 들어와 과학과 문화에서 생물학적 결정론을 극복하려는 운동이 일어났다. 즉, 인간은 학습을 통해 유전적인 경향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노골적인 인종차별주의를 부추기는 생물학적 결정론이 흥수를 이뤘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형질에는 직접적이고 유전적인 기반이 존재한다”는 가설을 이용



올해는 다윈 탄생 2백 주년이다.

해 ‘흑인들에게 유아적인 특성이 있다’, ‘가난하게 태어날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폭력적’이라는 등의 생물학적 결정론이 득세했다.

그러나 굴드는 이러한 생물학적 결정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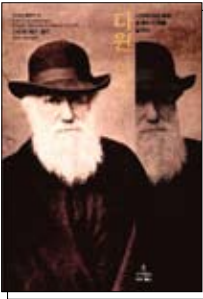
그리고 인간본성과 지능지수의 상관관계를 증명하려고 했던 과학자들이 제시한 예들이 현실에서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음을 강조했다.

“생물학적 결정론은 책임을 이룬바 우리의 육식성 조상들에게 떠넘길 수 있다니 얼마나 속 편한 일인가? 가난한 사람과 굶주린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그들의 태생 조건에 돌릴 수 있다니 이 또한 얼마나 편리한가? 따라서 우리는 이 사회가 모든 인간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데 철저히 실패한 책임을 우리 사회의 경제 체제나 정부에 물어야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 책은 인종에 대한 불필요한 구분, 지능지수 검사의 불순한 의도, 유전자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불쾌한 생물학적 결정론을 통쾌하게 논박한다. 또한 유쾌한 과학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수많은 자료들로 가득하다. ‘일찍 태어나는 아기’, ‘아일랜드 엘크의 멸종 원인’, ‘파리의 모체 살인’, ‘대나무와 매미의 주기성’ 등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

종교적·사회적·문화적 편견 속에서 질식당하는 진리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려 하고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들에게도 과학적 상상력과 무한한 자극을 주는 이 책의 매력에 흠뻑 빠져 보자.

강이주



스티븐 J. 굴드, 《다윈 이후》, 사이언스북스, 2만 원, 432쪽

〈로니를 찾아서〉(심상국 감독, 92분)

우리가 연대해야 할 수많은 ‘로니’를 찾아서



《로니를 찾아서》, 심상국 감독, 92분

굴세 따위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알게 해 줬다.

몇 년 뒤 조비는 장물인 줄 모르고 산 오토바이가 교통경찰의 단속에 걸리면서 화성외국인 ‘보호’소에 ‘수감’됐고 그 뒤 ‘추방’됐다.

영화 속 로니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이다. 일부 한국 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를 ‘일지리를 빼앗고, 잠재적으로는 범죄와 테러’를 일으킬 우범자로 바라본다. 인호도 그런 인물이다. 그는 무뚝뚝하고 자존심 세고 고지식한 ‘한국의 국기’인 태권도 사범이다.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하는 방법 활동을 하던 중 역전에서 액세서리를 팔던 로니의 좌판을 뒤집으면서 그 둘의 인연이 시작된다. 줄어드는 원생들을 모으기 위해 ‘국가대표 초청 태권도 시범대회’를 열던 자리에서 인호는 로니와 맞붙어 한방에 나가떨어진다. 이 일로 원생도 줄고 그의 자존심도 바닥에 떨어졌다.

이제 인호에게 모든 ‘머피의 법칙’에 로니가 있었고 이때부터 로니를 찾아 나선다. 로니를 찾기 위해 그의 친구 푸힌과 티격태격하면서 미운 정도 들지만, 이주노동자들에게 갖고 있던 불편함과 편견, 짜증과 적개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급기야 불법체류 중인 이주노동자들이 있는 곳을 출입국관리소에 고발하기에 이른다.

로니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 그곳을 찾은 푸힌은 단속을 피해 건물에서 뛰어내리다 다리를 다치고 만다.

‘로니를 찾아서’ 방글라데시로 떠난 인호의 마지막 모습에서 나는 10여 년 전 나의 모습을 본다. 이주민을 향한 내국인들의 편견과 적개심의 눈빛이 수많은 ‘로니’들을 괴롭혔을 것이다.

나는 ‘로니’를 찾아 떠나는 대신 평범한 그들과 연대하고 함께 싸우기를 택했다. 한국 사회의 허울 좋은 ‘단일민족 신화’ 이데올로기는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 이미 구태가 된 지 오래다. 그러나 지배자들은 앞에서는 ‘다문화 가정 캠페인’을 벌이지만, 뒤로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거침없이 파괴한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친구다. 힘든 삶에서 나오는 적개심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 사이를 분리 지배하려는 지배자들을 향해야 한다.

오늘도 나는 음식점에서 재중동포를, 시골 마을 농촌에서나 길을 가다가 흔하게 이주노동자와 외국인을 만난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로니’와 ‘푸힌’과 연대하는 게 필요하다.

최윤진

이강택 칼럼

나는 고백한다 — 김은희 작가를 생각하며



이강택 PD연합회장을 지낸 KBS 이강택 PD는 <KBS 스페셜> '얼굴없는 공포, 광우병'을 연출했다. 이강택 PD는 7월 23~26일에 열리는 다함께 주최의 진보포럼 '말시즘 2009'에서 '미디어법 : 무엇을 위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나?'라는 주제로 연설할 예정이다.

“더빙 당일 새벽, 혹시나 해서 가봤더니 원고를 거의 못 쓴 채 울고 있더라고요 …” 최근 방송가 한 지인으로부터 들은 <PD수첩> 김은희 작가의 근황은 내심 걱정하던 그대로였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간수의 시선을 항상 의식하며 고통받다가, 점차 그 규율을 내면화해 스스로를 검열하게 되는 파놉티콘(원형 감옥)의 죄수. 아무리 당차고 씩씩한 그녀라지만 그 내상을 어찌 견딜까. 적의로 가득한 권력의 시선에 의해, 언제든 다시 열토 당토않게 엮여져, 만천하에 ‘맨몸’이 공개될 수 있다는 공포. 그 앞에선 작가실도, 가정도 더 이상 안락한 공간이 아니며, 그 정보 감옥 하에선 어떤 사적 행위나 대화도 입맞대로 가공돼 전파될 테니. 누군들 영혼을 규율당하지 않을 수 있으랴. 안쓰러운 마음에 나는 MBC구성작가협회회 게시판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곧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공개된 메일 문구, 진실은 이렇습니다>를 통해 그녀는 또렷이, 낱낱이 항변하고 있었다. 방송이 끝나고 한참 후 우연히 만난 담당PD와 시니컬하게 주고받은 농담이 마치 정색을 하고 나는 ‘사건 모의’로 각색되고, 세간의 표현에 거리를 두고자 사용했던 따옴표와 이모티콘들이 의도적으로 누락되고, 결코 자신의 뜻이 아닌 구절이 마치 작가 김은희의 육성인 양 억지로 갖다 붙여진 전말들. 아마도 그들 검찰과 조종동은, 적어도 정식 재판이 열리기 전에는 자신들 이외의 그 누구도 원본을 대조해 보지 못한다는 점을 노렸으리라. 그 글을 다 읽고서 나는 그녀에게 한없이 미안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돌아보면

나 자신도 1980년대에 보안사에서, 무수히 언어맞으며 그들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쓰고 그것이 그들에 의해 ‘사건’으로 창조되는 과정을 몸소 겪지 않았던가! <추적60분>을 담당할 때, 얼마 전 재심이 결정된 ‘진도고정간첩단’ 사건을 다루면서 그들이 어떻게 간첩을 ‘조달’하는지 그 수법을 낱낱이 알게 되지 않았던가! 그런 내가 잠시나마 진실을 헛갈려 하다니. 무슨 수를 쓰건 반드시 그녀의 ‘악의’를 입증하고, 그래서 <PD수첩> 제작진들의 ‘악의’를 입증함으로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채워 넣고, 그것을 대대적으로 공표해 기정사실화할 의도임을 어찌 단박에 꿰뚫어보지 못했던가!

하여, 나는 참으로 아둔하게도 이제야 온전히 분노한다. 진정 악의를 가진 쪽은 검찰과 조종동 바로 당신들이 아니던가? 독사의 새끼들처럼 헛바닥을 날름대며 피에 주려 인격 살인을 자행한 파시스트 잔당 그대들이 아니던가? 이것이 당신들이 입만 열면 떠벌리는 자유민주주의의 맨 얼굴인가? 진정 민주주의를 말하려거든 생각해 보라. 정녕 감시받아야 할 대상은 한 개인이나 저널리스트의 사생활이 아니다. 전직 대통령마저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검찰과 국세청 등 소위 공권력, 온갖 탈법을 일삼으며 자기 신문의 발행부수조차 공개 않는 언론 권력, 그리고 그들과 패거리를 짓는 정상모리배들의 행태에 대한 공적 정보다. 그 실상이 알려진다면 얼마나 악취가 진동할 것인가? 그럼에도 당신들은 어둠 속에 숨어 낱낱대며 시민들을 감시하는 간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거꾸로 뒤집힌 시대

를 배경으로.

그녀는 말했다. “개인 김은희는 짓밟히더라도 작가 김은희가 열정을 다해 만들었던 프로그램의 정당성까지 함부로 짓밟히고 공격받는 것만은 참을 수 없다”고. 20여 년을 저널리스트로 살아온 나는 이 대목을 떠올리며 눈시울이 뜨겨워진다. 그 처절한 심경의 일단을 짐작하기 때문이다. 우리 저널리스트들은 진실에 목숨을 건다. 그래서 방송이 나가는 최후의 순간까지 며칠씩 낱밤을 새운다. 누가 뭐래도 진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저널리스트의 명예요 최후의 자존심이기 때문이다. 그 심정을 알기에, <PD수첩> ‘광우병’ 편과 관련된 팩트들을 나 역시 줄곧 고민해 왔기에, 나는 선언한다. 그녀에게는 죄가 없다! 나는 거기에 저널리스트로서 나의 식견과 명예를 건다! 그리고 고백한다. 만약 그 상황에서 다시 프로그램을 제작했다면 나도 거의 유사하게 만들었을 것이며, 불가피하게 몇 가지 사소한 실수를 했을 것이며,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광적으로’ 분노했으리라 하는 것을.

작가 김은희는 우리 시대의 ‘유대인’이다. 교활한 ‘떡볶이 놀음’과 공간 통치의 부활이라는 음험한 이중주 속에서, 그녀를 가두고 있는 원형 정보 감옥은 벌써 YTN 노조원들을 또다른 죄수로 맞아들였다. 바야흐로 허다한 시민사회의 성원들이 ‘빨갱이’의 낙인 하에 고립되어 그 감옥의 수인이 될 것이다. 하여, 그녀가 당한 불의에 침묵하는 것은 이 시대 지식인의 죄악이다. 신종 파시즘의 도래를 방관하는 찻을 수 없는 죄악이다.

불황 하의 마르크스주의자들 ①

그람시와 전쟁의 두 국면

이 글은 연재의 첫번째 글로, 크리스 뱀버리(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편집자)는 노동자 투쟁과 혁명 간 관계를 고찰한다.



1930년 11월 이탈리아 마르크스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는 옥중에서 당대 경제 불황의 여파와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을 분석했다.

훗날 <옥중수고>에 수록된 이 글은 과거 그람시가 창당을 도왔던 이탈리아 공산당 지도부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이었다.

당시 이탈리아 공산당원들은 스탈린의 노선을 추종해 1929년 월 스트리트 붕괴가 자본주의 최종 위기이고, 노동계급의 혁명적

공세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탈리아 청년 공산당원들은 파시스트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를 제거하기 위한 ‘대중 사업’을 시작하려고 이탈리아 국경을 넘어 들어왔다. 그러나 단 몇 주만에 그들은 파시스트 비밀 경찰에 의해 일망타진됐다.

체포된 공산당원 중 몇몇은 그람시가 수감된 감옥으로 이송됐는데, 혁명이 당면 의제라는 주장을 그람시가 비판하자 그들은 격렬히 반발했다.

그람시는 ‘기동전’과 ‘진지전’이라는 유명한 [군사 전략의] 비유를 들어 자기 의견을 설명했다. 기동전은 제1차세계대전 당시 동부 전선에서 진행됐던 전격전과 유사하다. 반면에 진지전은 서부 전선과 이탈리아 전선에서 주된 전쟁 형태였던 참호전에 비유될 수 있다.

그람시는 이 비유를 이용해 경제 위기 상황을 분석했다.

“위기 상황이라고 공격군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순식간에 대오를 갖추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위기가 자동으로 투쟁 의지를 높이지도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수비군은 아직 사기가 꺾이지 않았다. 그들은 아직 자기 힘이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잃지도 않았고, 심지어 폐허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방어 거점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덧붙여 “물론 모든 것이 그대로는 아니다. 그러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지는 않고 있다” 하고 말했다.

1929년 대공황은 지배계급과 그 아첨꾼들의 자신감에 큰 충격을 줬다. [지배자들의] 혁명에 대한 공포가 경제 위기의 해결을 둘러싼 심각한 분열과 결합됐다.

즉, [경제 위기로] 좌파와 노동자계급에게 기회가 생겼다. 그러나 적들이 전장에서 도망간 것은 아니었다.

이탈리아에서는 파시스트 독재 권력이 노동계급 반란을 분쇄하고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람시는 이탈리아 공산당원들이 사회당을 파시스트만큼 나쁘다고 공격한 것을 비판하면서 사회당이나 다른 세력들과 반파시즘 동맹을 건설하는 것이 옳았을 거라고 주장했다. 그람시는 설사 무솔리니 정권이 붕괴하더라도 즉각 혁명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 경고했다.

당시 노동자 투쟁은 성장중이었지만 당장 혁명적 결론에 도달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는 않았다.

세계 곳곳의 저항에서 당면 과제는 실업자 집단의 조직이었다. 시카고 청년 공산주의자들은 잘 곳을 찾아 간이 숙소로 모인 집없는 청년 실업자들을 조직했다. 영국의 전국실업노동자운동은 “기아 행진”을 이끌었을 뿐 아니라, 실업자 가족들이 먼저 재산을 처분해야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정부 정책에 반대했다.

1933년 1월 독일에서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하자, 이에 충격을 받아 반파시즘 운동이 크게 성장했다.

1934년 2월 프랑스 파시스트들이 인솔한 시위대가 의회를 공격했고, 그 결과로 중도좌파가 주도하는 정부가 물러났다. 파시즘이 다른 모든 세력을 압도하는 듯이 보였다.

프랑스 노동조합들은 하루 총파업을 호소했고, 이 총파업은 곧 노조의 틀을 뛰어넘어 확산됐다. 수십만 명이 가두 시위를 벌였고, 파시스트들은 뒤로 물러났다. 동시에 1934년에 경기가 조금 안정됐다. 이 두 가지 변화가 결합돼 프랑스에서 대중 파업 물결이 일어났다.

미국에서 기층 노동자들이 주도한 세 파업 — 미니아폴리스 트럭 노동자들, 샌프란시스코 항만 노동자들 파업, 콜레도 타이어 노동자들 파업 — 은 공장 점거로 연결된 대규모 파업 물결을 낳았다. 이 파업으로 자동차 · 타이어 · 철강 기업 노동자들이 노조로 조직됐다.

영국에서는 옥스퍼드를 지나가는 기아 행진을 환영하려고 만들어진 진 위원회가 코울리 자동차 공장에서 노조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성과급에 반대하는 파업을 벌인 영국 여성 노동자 수십만 명은 좌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들은 함께 현장 파업위원회를 건설했다.

노동자들은 이 파업으로 노동조합 승인을 얻어냈다. 이후 파업과 노동조합 조직은 항공산업, 자동차 공장, 광산, 심지어 견습 노동자들로 확산됐다.

1934~1936년 사이에 혁명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훔긔 보였다. 그러나 승리가 미리 정해진 것은 아니었다.

PKO 파병법과 해외파병 상비부대 창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위한 꿈수 부리기

아프가니스탄에 한국군을 재파병할 계획이 없었던 정부가 6월 16일(미국 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바마와 재파병을 논의하고 돌아왔다.

이명박은 6월 20일 야당 대표들에게 정상회담 성과를 자랑하다가 ‘오바마가 한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재파병하기 바라더라’고 말해 한미정상회담에서 재파병 논의가 있었음을 드러냈다. 지난해에도 이명박은 부시와 정상회담을 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논의를 해 놓고 오리발을 내민 적이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비밀리에 재파병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관계자들은 언론 인터뷰에서 재파병을 추진하다가 자칫 ‘제2의 촛불’로 번지지 않을지 우려한다고 밝혔다.

아프가니스탄은 한국 정부의 파병 정책으로 2007년 선교사 23명이 피랍돼 2명이 사망한 지역이다. 당시 아프가니스탄에서 인질 석방 협상을 책임졌던 국정원장 김만복은 “다시는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파병 국가의 국민도 테러의 표적이 됐기 때문에 철군의 목소리도 높았다. 이 때문에 그해 말 동의부대와 다산부대가 모두 철수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6월 26일 이명박의 재가를 얻어 특전사령부 산하에 3천 명 규모의 해외파병 상비부대를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를 법



5월 19일 재파병 반대 기자회견

사진 임수현

적으로 뒷받침할 특별법인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참여에관한법률’ (일명 신속 평화유지군(PKO) 파병법)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회 동의를 얻지 않고도 한 번에 특전사 1천 명을 유엔 안보리 결의가 뒷받침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파병할 수 있다.

그러나 유엔 평화유지군은 평화를 유지하

기는커녕 오히려 온갖 악행을 저질러 현지에서 증오의 대상이 돼 왔다. 소말리아에서는 평화유지군이 지역민들을 학살하다 쫓겨났다. 2005년 레바논에 파병된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은 금전 비리 때문에 쫓겨났다.

백지수표 파병

그런데도 지난 5월 국방부는 2007년 평화유지군으로 레바논 남부에 파병된 이 나라의 동맹부대도 이스라엘과 미국의 패권을 돕는 구실만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신속 평화유지군 파병법을 제정하면 매년 번거롭게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사실상 백지수표 파병법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신속 평화유지군 파병법 제정과 해외파병 상비부대 창설이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발뻘한다. 4대강 정비가 한반도 대운하가 아니라고 우기는 것과 꼭 마찬가지다.

6월 20일 이명박은 박희태와 이회창을 만난 자리에서 평화유지군 형식의 파병을 언급했다가 이회창 쪽이 이를 언론에 발표하자 서둘러 말을 주워담은 바 있다.

그러나 어찌 평화유지군 파병법 제정과 해외파병 상비부대 창설이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위한 술책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김덕업 반전평화연대(주) 공동 간사

제10회 다함께 진보 포럼

맑시즘2009

고장난 자본주의, 대안을 말하다

2009년 7월 23일(목) – 26일(일) | 장소_ 고려대학교 | 주최_ 다함께

23일
목요일

4:00 – 5:20

알기 쉬운 자본론 쏙쏙 강의 ①
· 자본주의는 왜 위기에 빠지는가?
장시복 _ 목포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혁명가들의 생애와 사상 ①
· 마르크스

· 대운하의 새 이름, '4대강 살리기'
— 녹색 성장의 길인가?

김정욱 _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학교 교수모임 공동대표

· '책시' 열풍 — 성해방인가? 성차별의 또다른 얼굴인가?

6:20 – 7:40

· '맑시즘2009 — 고장난 자본주의, 대안을 말하다'
개막식

8:00 – 9:40

· 21세기 노동자 계급
크리스 하먼 _ 영국의 좌파 이론자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편집자 /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

· 88만 원 세대의 학생운동
이원기 _ 한대련(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5기 의장
김지윤 _ '고대녀' 로 알려진 고려대학교 학생 / <레프트21> 기자

음악·문학·영화·전시가 함께하는 맑시즘2009



지난해 맑시즘2008에서는 <하디
타 전투>, <산티아고에 비는 내린
다> 등의 영화상영, 촛불운동의 열
정과 저항을 다룬 전시 '마법에 빠
진 시대', 팔레스타인의 삶과 투
쟁을 다룬 '나지 알 알리' 카툰 전시, DJ soulscape와 함께 하는
'마틴 루터 킹 이후 흑인 음악', 윈디시티/킹스턴 루디스카의 공
연 "촛불진치", 백무산/송경동 시인이 함께 한 문학의 밤 등의 문
화행사가 열려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맑시즘2009에서도

▶ <반두비> 주연 마뽀 알업 펠름이 감독한 다큐멘터리
<리터니>, <찰리 채플린 탄생 120주년, 작은 회고전>,
<하비밀크의 시대> 등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는 영화

▶ 문학과 음악이 함께하는 밤 (오수연 작가가 들려주는
팔레스타인 이야기)

▶ 영국 맑시즘2008에서도 주목받은 감직한 디자이너
'쓰바'의 작품 전시

...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4일
금요일

10:00 – 11:40

· 우석훈이 진단하는 한국 경제, 문제와 대안
발제자 : 우석훈 _ <88만원 세대>, <괴물의 탄생> 저자
토론자 : 강동훈 _ <레프트21> 기자

· 경제 회복을 위해 노동자들이 희생해야 하는가?
하종강 _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12:00 – 1:20

패널토론 [12:00 – 1:40]

· '운동권 거부장제' 논란 — 진단과 해법

· 중국 혁명 60년 — 마오쩌둥부터 시장 개방까지

2:40 – 4:00

알기 쉬운 자본론 쏙쏙 강의 ②

· 착취와 노동가치 이론

김창근 _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혁명가들의 생애와 사상 ②

· 트로츠키

· 북한의 핵과 오바마, 그리고 이명박

김하영 _ 다함께 운영위원 / <국제주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 저자

· 옛 소련 블록은 사회주의 사회였는가?

김인식 _ <레프트21> 발행인

· 이주자, 인종주의 그리고 다문화주의

마뽀 알업 펠름 _ 방글라데시 출신 배우이자 다큐멘터리 감독 /
영화 <반두비> 주연 / 제4회 이주노동자영화제 집행위원장

4:30 – 5:50

· 오바마의 '뉴딜'은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장시복 _ 목포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 전략과 전술

최일봉 _ 다함께 운영위원이자 국제연락간사 /
<러시아 혁명과 레닌의 사상> 저자

· 사회적 기업, 공정무역 ...

—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는 가능한가?

[4:30 – 6:00]

· 차베스 집권 10년의 베네수엘라 — 한국에 주는 교훈

임승수 _ <차베스, 미국과 맞짱뜨다> 저자

이수현 _ <차베스와 베네수엘라 그리고 21세기의 혁명> 역자

7:00 – 8:50

· 오늘의 세계 경제 위기

— 자본주의는 왜 고장났고, 대안은 무엇인가?

크리스 하먼 _ 영국의 좌파 이론자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편집자 /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

· 한국 사회의 변혁과 민주주의

흥미진진한 청중토론

매년 참가자들은 활발한 청중토론을
최고 장점으로 꼽은 했습니다.

맑시즘2009는 토론 시간의 4분의 1 이상을
청중 토론에 할애합니다.

이 시간에는 누구든 3분 동안 발언할 수 있습니다.

25일
토요일

10:00 – 11:40

· 금융세계화의 시각에서 본 오늘의 경제 위기

발제자 : 이종태 _ 금융경제연구소 연구기획위원

토론자 : 이정규 _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은 오바마의
수량이 될 것인가?

탈라트 아흐메드 _ 인도 출신 여성 사회주의자 /
골드스미스 런던대학 남아시아 역사학 강사

[10:00 – 11:20]

· 마르크스주의는 반성대적인가?

최병두 _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

12:00 – 1:20

[12:00 – 1:40]

· 맑스주의로 본 오늘의 경제 위기, 원인과 대안

발제자 : 정성진 _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21세기 대공황과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와 트로츠키> 저자

토론자 : 섭이중

· 독설닷컴 고재열, 이명박의 민주주의를 말하다
고재열 _ <사사HN>기자 / 블로그 '독설닷컴' 운영자

2:40 – 4:00

알기 쉬운 자본론 쏙쏙 강의 ③

· 경쟁과 축적, 자본주의의 동학

김정주 _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 이란 반정부 시위 — 민중 항쟁인가 친서방 폭동인가

· 맑스주의적 성서 읽기

김원일 _ 미국 라싸에라 대학교 종교학 교수 / 미국 성서학회 선임회원

혁명가들의 생애와 사상 ③

· 레닌

· 한국 현대사 속의 민주주의

김광규 _ 인천 석정영고 역사 교사

4:30 – 6:00

패널토론

· 진보진영,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패널토론

· 용산참사 6개월, 개발주의와 그 그늘

패널토론

· 경제위기와 자구온난화

이유진 _ 녹색연합 에너지·기후변화 팀장

장호중 _ <레프트21> 기자

[4:30 – 5:50]

· 중국은 세계 경제 위기의 구원자인가?

이정규 _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4:30 – 5:50]

· 스톤월 항쟁 40주년 — 성소수자들의 삶과 투쟁

정율 _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7:00 – 8:50

· 오늘의 제국주의

— 미국의 몰락과 새로운 강대국들의 부상?

크리스 하먼 _ 영국의 좌파 이론자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편집자 /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

패널토론

· 경제 위기 시대 노동운동

— 진정한 혁신과 연대 전략은 무엇인가

26일
일요일

10:00 – 11:20

· 저자에게 직접 듣는 《부동산 계급사회》

손낙구 _ <부동산 계급사회> 저자

· 미디어법 : 무엇을 위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나?

이강택 _ KBS PD / 전 PD연합회장

· 맑스 vs 케인스 vs 플라니

이정규 _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11:50 – 1:10

· 이명박 장로 치하, 예수의 삶을 통해 진보의 희망을 찾다

김규환 _ <예수전>, <나는 왜 불온한가> 저자

패널토론 [11:50 – 1:20]

· 위기의 자본주의 — 학생좌파의 대안은 무엇인가

[11:50 – 1:30]

· 서발턴과 포스트식민주의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탈라트 아흐메드 _ 인도 출신 여성 사회주의자 /
골드스미스 런던대학 남아시아 역사학 강사

2:40 – 4:00

패널토론 [2:40 – 5:20]

· 진보의 재구성 — 21세기 한국 좌파의 전망

· 세계화 · 이주 · 여성

문현아 _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연구원 /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코디네이터

· 자본주의와 예술

이기용 _ 경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패널토론 [2:40 – 4:10]

· 숨 막히는 이명박 식 경쟁 교육

4:30 – 5:50

· 다윈 200년, 진화론에 대한 오해와 진실
— 다윈은 유전자 결정론자였는가?

· 왜 21세기에도 전염병이 도는가?

박성표 _ 국민건강을위한수의자연대 정책국장 /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한 연구위원

혁명가들의 생애와 사상 ④

· 로자 룩셈부르크

6:00 – 7:00

폐막식

어린이 놀이방



맑시즘2009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을 운영합니다.

놀이방에서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식사 · 놀이 ·
수면 등을 할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미리 신청하세요.

참가비 하루 : 23일(목) 8,000원, 24(금)~26일(일) 12,000원 / 나흘 : 40,000원

※ 대학생 할인 하루 : 23(목) – 6,000원, 24(금)~26(일) – 9,000원 / 나흘 : 30,000원

※ 청소년, 이주노동자, 장기투쟁 작업장 노동자 할인 하루 : 23(목) – 3,000원, 24(금)~26(일) – 5,000원 / 나흘 : 15,000원

www.marxism.or.kr

Tel 02 2271 2395 | marxism2009@gmail.com | blog.marxism.or.kr